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Analysis of Employment Creation Area and Effect in
Marine and Fisheries

2017. 10.

박광서·김근섭·김태일·윤성순·장홍석·최석우·이정민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박 광 서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부록

<연구진>

김 근 섭 (연구위원) : 제4장

김 태 일 (연구위원) : 제4장

윤 성 순 (연구위원) : 제4장

장 흥 석 (연구위원) : 제4장

최 석 우 (전문연구원) : 제3장

이 정 민 (연구원) : 제2장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오 상 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권 영 규 (해양수산부 사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연구감리자

정 명 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
제4절 연구 수행방법	6

제2장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 현황 · 7

제1절 일자리위원회의 계획	7
1. 공공부문	7
2. 민간부문	10
제2절 해양수산부의 계획	12
1. 공공부문	12
2. 민간부문	13
제3절 소결	15

제3장

고용효과 산출방법 고찰 · 17

제1절 고용영향평가 개요	17
1. 고용영향평가 제도	17
2. 고용효과 산출 원칙	19
제2절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산출 방법	21
1. 일반 재정지출 사업	21
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4
3. 기타 사업	28
제3절 소결	30
1. 고용효과 산출기준	30
2. 고용효과 산출방법	31

제4장

해양수산 정책과제 고용효과 분석 · 33

제1절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33
1. 해양수산 국정과제	33
2. 해양수산 정책과제	34
제2절 정책과제별 고용효과 분석	36
1.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36
2. 광역 자유무역지대 조성사업	40
3.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43
4.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개선사업	46
5.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49

6. 원양해운 재건사업	52
7.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비즈니스 개발사업	56
8.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사업	59
9.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64
10.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사업	68
11.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70
12.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	73
13.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75
14.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78
제3절 소결	8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87

제1절 요약 및 결론	87
제2절 정책제언	88



참고문헌 · 91



부 록 · 92

〈표 1-1〉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비교	5
〈표 2-1〉 일자리위원회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9
〈표 2-2〉 일자리위원회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11
〈표 2-3〉 해양수산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12
〈표 2-4〉 해양수산부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14
〈표 2-5〉 해양수산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	16
〈표 3-1〉 일반 재정지출 사업(예산비목 적용) 예시	22
〈표 3-2〉 일반 재정지출 사업(지출내역 적용) 예시	23
〈표 3-3〉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산출 산식(종합)	32
〈표 4-1〉 고용효과 분석대상 14개 해양수산 정책과제 선정결과	35
〈표 4-2〉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38
〈표 4-3〉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39
〈표 4-4〉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40
〈표 4-5〉 광역 자유무역지대 조성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43
〈표 4-6〉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44
〈표 4-7〉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45
〈표 4-8〉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46
〈표 4-9〉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개선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47
〈표 4-10〉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개선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48
〈표 4-11〉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개선 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49
〈표 4-12〉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50
〈표 4-13〉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51
〈표 4-14〉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52
〈표 4-15〉 원양해운 재건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54
〈표 4-16〉 원양해운 재건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55
〈표 4-17〉 원양해운 재건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56
〈표 4-18〉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비즈니스 개발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57

〈표 4-19〉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비즈니스 개발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58
〈표 4-20〉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비즈니스 개발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59
〈표 4-21〉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60
〈표 4-22〉 해양치유 R&D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61
〈표 4-23〉 해양치유 인력양성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62
〈표 4-24〉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63
〈표 4-25〉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64
〈표 4-26〉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66
〈표 4-27〉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67
〈표 4-28〉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68
〈표 4-29〉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69
〈표 4-30〉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70
〈표 4-31〉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사업비 산출내역	71
〈표 4-32〉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고용효과 산출내역	72
〈표 4-33〉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고용효과 분석결과	72
〈표 4-34〉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73
〈표 4-35〉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74
〈표 4-36〉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75
〈표 4-37〉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76
〈표 4-38〉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77
〈표 4-39〉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77
〈표 4-40〉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79
〈표 4-41〉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80
〈표 4-42〉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80
〈표 4-43〉 해양수산 정책과제의 고용효과 분석결과(총 고용)	81
〈표 4-44〉 해양수산 정책과제의 고용효과 분석결과(예산 10억 원당 고용)	83
〈표 4-45〉 타 분야 정책과제의 고용효과 분석결과(예산 10억 원당 고용)	84

» 그림목차

[그림 3-1] 정책 심층 고용영향평가 절차.....	18
[그림 3-2]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	19
[그림 4-1]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 국정과제 현황.....	34
[그림 4-2] 고용효과 상위 15개 정책과제 현황(10억 원당 고용).....	86

요약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잠재력 방대

**-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의 고용효과는 10억 원당
25.1명으로 타 분야와 비교해서도 매우 우수 -**

‘일자리’는 개인적으로는 소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OECD 회원국들의 경우 2010년을 정점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더구나 ‘제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람중심 경제’로 압축되며,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최우선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추가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안)」을 수립하고, 해양수산 분야 약 3만 8,000개, 타 분야 약 7만 8,000개 등 총 11만 6,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해양수산부 주관과제가 3개가 포함되었으며, 그 밖에 20여개 과제도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이 깊다. KMI는 신정부의 정책공약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내 과제 발굴 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

쳐 87개의 '신정부 해양수산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 사업의 중요도, 사업 규모,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14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산 10억 원당 고용효과가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이 25.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16.8명,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15.7명,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14.8명,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사업' 13.8명 순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고용영향평가 전담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5~2016년 동안 평가한 타 분야 재정사업의 고용효과와 비교하면, 고용효과가 큰 상위 15개 과제에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과제는 5개가 포함되었다. 특히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의 고용효과는 3위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수산 분야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이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하지만, 속성상 무역 인프라 기능 수행, 국민 안심 먹거리 제공, 해양영토 수호, 국민의 삶과 생활터전 제공 등 국민 경제와 국민생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범정부 차원의 인식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의 당위성과 시급성, 고용효과 등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부, 국회 등 의사결정자를 설득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수산 고용통계 시스템 구축,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 중심적 정책 추진,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 유도, 해양수산 일자리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일자리’는 개인적으로는 소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KDI(2017)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39%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미국에서는 실업률 1%p 상승 시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가 14~32건 증가했고, 실업률이 떨어질 경우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일자리 창출이 중차대한 과제로 등장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 수가 102만 명, 실업률은 3.7%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청년(15~29세) 실업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7년 말 기준 청년 실업자 수는 42만 6,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수의 41.6%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9.8%) 역시 전체 실업률(3.7%) 대비 2.6배를 기록하고 있다.²⁾

반면에 세계 주요국의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2010년 대비 2016년의 실업률이 미국은 9.6%에서 4.9%로, 영국은 7.8%에서 4.8%로 떨어졌으며, OECD 회원국 기준으로도 8.6%에서 6.3%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³⁾ 그럼에도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가령 EU는 중기계획인

1)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10.18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jsp>)

3) 청년 실업률(% , '10→'16) : 미국(18.4→10.4), EU(21.0→18.7), 영국(19.9→12.9), OECD(16.7→12.9)

‘Europe 2020’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위한 고용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⁴⁾

한편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이래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이른바 ‘노동절약형 경제’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202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716만개가 사라져 전체적으로 51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맥킨지(2016)도 203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간 중 최대 49.7%가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⁵⁾

고실업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최고 우선순위에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 복지, 노동, 교육과 관련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새 정부의 제1호 행정명령으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데 이어, 10월 18일에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대선공약인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과 함께 창업 촉진과 산업경쟁력 제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이 담겼다.

해양수산 분야 역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임은 자명하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017)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해양수산 분야 취업자 수는 66만 6,071명으로 전체산업 취업자 수(2,356만 7,991명) 중 2.83%를 차지하였다.⁶⁾ 취업자 수는 2011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정체되어 있다. 게다가 해운과 조선의 동반침체로 인해 관련 산업의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 상황은 2014년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설파했듯이 육상자원의 고

4)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10.18

5)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7.1에서 재인용

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장전망 분석, 2017.2

갈,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해양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곧 해양수산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기회가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해양자원 개발, 해상 교역량 증가,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OECD(2016)에 따르면, 2010~203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 증가율은 29.7%로 전체 산업의 고용 증가율(27.5%)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해양수산 일자리는 항만도시, 해양관광도시, 어촌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이자 세계 시장과 맞닿아있는 글로벌 일자리로써 청년과 여성들이 도전할만한 분야로 여겨진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수립할 때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맞물려 고용영향평가제도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국민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도출한 ‘신정부 해양수산 정책과제’⁷⁾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거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발굴하고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고용효과를 산출하고, 고용효과 크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에서 재정사업을 선정·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나아가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선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향후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효과 산출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7) KMI는 신정부의 정책공약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내 과제발굴 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정부에서 추진할 87개의 해양수산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본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과 고용영향 평가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분야 및 규모를 제시한 선행분석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정부 해양수산 정책과제’ 중에서 사업의 중요도, 사업 규모, 실현가능성 등을 토대로 대표적인 과제를 고용효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향후 5년(2022년)까지로 한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해양수산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분야를 발굴하고 고용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먼저 해양수산부(2016a)는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정책 체계화 및 신규정책 발굴을 통한 중장기 고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발굴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고용창출 분야를 발굴하거나 고용효과를 측정하지는 못했다.

해양수산부(2016b)는 해양수산 분야의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해양수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해양수산 분야의 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35개의 미래 유망직업을 제시하였으나 고용 창출효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은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 분야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규모를 산출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 및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 의존하여 분석하다 보니 과제 또는 사업 별로 분석방법이 다르고,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고려되었다.

〈표 1-1〉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비교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동향 파악 및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자(년도): 해양수산부(2016a) -연구목적: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정책 체계화 및 신규정책 발굴을 통한 중장기 고용활성화 추진방안 마련	-문헌조사 -전문가심층인터뷰 -사업체 수요조사	-해양수산 산업 및 고용 현황 분석 -국내외 고용정책 사례 분석 -해양수산 고용활성화 수요조사 -해양수산 고용활성화 추진방안
	2	-과제명: 해양수산 분야 인력양성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자(년도): 해양수산부(2016b) -연구목적: 해양수산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방안 마련	-문헌조사 -전문가심층인터뷰 -통계분석 -학생, 교사 설문 조사 분석	-해양수산 인력양성 실태 분석 -해양수산 인력 수급전망 분석 -국내외 인력양성 정책 및 사례 분석 -해양수산 인력양성방안 및 로드맵
	3	-과제명: 새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자(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 -연구목적: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발굴 및 규모 추정	-문헌조사 -관계기관 협의	-해양수산 고용 현황 -해양수산 일자리 특성 및 전망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분야 및 규모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
	4	-과제명: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안) -연구자(년도): 해양수산부(2017) -연구목적: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발굴 및 규모 추정	-전문가 자문	-해양수산 일자리 현황 -해양수산 일자리 전망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본 연구의 차이점	-해양수산 국정과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실시	-전문가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	-고용효과 산출방법 분석 -일자리 창출계획 분석 -해양수산 고용효과 분석	

해양수산부(2017)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를 발굴하고 연차별 규모를 추정하였다. 주로 부처 내부의 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중심으로 집계하였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과 마찬가지로 과제 또는 사업별로 서로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2017)

는 향후 5년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고용영향평가제도」에서 정한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효과를 산출하게 된다. 분석대상 과제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도출한 87개 해양수산 정책과제 중 사업의 중요도, 사업 규모, 실현가능성 등을 토대로 14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제4절 연구 수행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였다. 둘째,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관련자료 수집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셋째,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문헌 및 인터넷 조사와 함께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넷째, 격주 1회에 걸쳐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4개 분석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다만 법률 및 제도의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도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 현황 <<

제1절 일자리위원회의 계획

새 정부의 제1호 행정명령으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는 높은 청년실업과 에코 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현재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의 미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⁸⁾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일자리를 81만 개로 확충하고,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1. 공공부문

81만 개의 공공일자리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제시되었다. 약 81만 개의 일자리 중 17만 4,000개는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34만 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이며, 나머지 30만 개의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 등으로 창출하게 될 계획이다.

현장민생공무원 인력은 경찰, 부서관, 교원, 생활안전⁹⁾ 등 국가직과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¹⁰⁾ 등 지방직으로 나누어 각각 10만 명, 7만 4,000명이 총원된다. 구체적으로는 파출소 순찰인력 및 경찰 수사인력 등 경찰인력이 2만 3,000명 총원되고, 부서관도 2만 6,000명 총원된다. 또한 유치원·특수 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교원이 2만 명 총원되며, 근로감독관, 집배원, 감염병 대응

8)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10.18

9) 인금체불 신고사건 급증, 소포물량 증가, 감염병 발생 증가 등에 대응하는 인력

10) 재난안전 등 지역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인력

인력 등 생활안전 인력이 3만 1,000명 충원될 계획이다. 지방직은 119 구급대 등 소방이력이 2만 명 충원되며,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등 사회복지인력이 1만 9,000명, 지역행정수요 증가 및 가축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생활안전 인력이 3만 5,000명 충원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총 34만 개 확대할 계획이나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17만 명이 먼저 충원될 계획이다. 보조·대체교사 및 아이돌보미 등 보육인력은 6만 4,000명이 충원되며, 고령화에 따른 치매 예방·관리 인력, 노인돌보미 등 요양인력은 4만 1,000명이 충원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 및 장애아동 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2만 4,000명이고, 보건의료에 충원될 인력은 3만 5,000명이다. 이어서 숲 해설사, 생활체육강사 등 환경·문화 분야에도 6,000명이 충원될 계획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 및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2019년부터 1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0만 명은 정규직 전환, 공기업·준정부·기타 공공기관 인력 충원,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은 3단계¹¹⁾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017년 말까지 7만 명 내외, 5년간 총 20만 명 전환을 계획 중이다. 공기업·준정부·기타 공공기관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6~8만 명을 확충할 계획이고, 나머지 충원 인력은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11) 1단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계획함

〈표 2-1〉 일자리위원회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단위 : 만 개)

구분		일자리	
현장민생공무원	국가직	경찰	2.3
		부서관	2.6
		교원	2.0
		생활안전 등	3.1
		소계	10.0
	지방직	소방	2.0
		사회복지	1.9
		생활안전 등	3.5
		소계	7.4
	소계		17.4
사회서비스	보육	6.4	
	요양	4.1	
	장애인	2.4	
	보건의료	3.5	
	환경문화	0.6	
	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	17.0	
	소계	34.0	
정규직전환 등	직접고용 전환	20.0	
	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인력 총원	6.0~8.0	
	근무시간 단축	2.0~4.0	
	소계	30.0	
합계		81.4	

자료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10.18

2. 민간부문

민간부문은 구체적인 수치 대신 일자리를 확충시킬 수 있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이 그 방안이다.

첫 번째로, 혁신형 창업 촉진 방안은 혁신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민간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창업위험 분산 및 재기 지원, 창업부담 및 규제 혁신 등의 세부 과제가 제시되었다.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벤처법을 개정하여 벤처 확인제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개편하고, TIPS¹²⁾ 모델을 활성화 하며 메이커스페이스¹³⁾를 조성하여 창업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 되는 민간기업 중심의 벤처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는 교수, 연구원 등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모태펀드를 출자하여 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사업실패의 부담으로 진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을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산업 및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친환경·스마트카, ICT 신산업,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하고,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투자 및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협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며, 핀테크, 공유경제 등 신 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의료관광, MICE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도 도입되어야 한다.

12) 중소기업청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13)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공간

세 번째는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 등의 해결 방안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육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을 통한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게다가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등 진출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거점 구축, 지역 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신성장 일자리 창출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표 2-2〉 일자리위원회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혁신형 창업 촉진	민간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창업위험 분산 및 재기 지원
	창업부담 및 규제 혁신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주력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산업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서비스산업 혁신 및 신서비스 시장 진출
규제혁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
	주요 분야별 진출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거점 구축
	지역 투자·사업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체계 고도화

자료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10.18

제2절 해양수산부의 계획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수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안)」¹⁴⁾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정책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3,177개, 민간부문 11만 3,316개 등 약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1. 공공부문

해양수산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각각 718명, 2,459명 총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원근로·복지, 해사안전, 수산물 안전 등 국민 안전 및 정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선원근로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및 수산생물 검역관 등을 총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총 17개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여건개선(기간·파견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 등을 통해 각각 1,363개, 1,096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총 2,459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2-3〉 해양수산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단위: 개)

구분		일자리
정부	해수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인력 총원	718
산하 공공기관	신규채용	1,363
	정규직전환	1,096
	소계	2,459
합계		3,177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안), 2017.8

1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안), 2017.8

2. 민간부문

민간부문은 해운·항만물류업, 해양건설업, 수산업, 해양산업으로 나누어 창출 가능한 일자리를 제시했다. 해운·항만물류업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총 4,841억 원을 투자하여 약 7,000개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운 산업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회복시키고,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신조를 추진하여 5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필수해운항만 제도¹⁵⁾ 도입 및 선원복지 강화 등을 통해 122개의 선원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컨테이너 물동량과 컨테이너 이외의 물동량 확대로 부두운영 일자리가 각각 1,411개, 1,975개 창출될 것이며,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해양수산업 관련 기업 일자리 272개, 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해 물류기업 등의 일자리 1,408개가 창출될 계획이다. 또한 선용품산업 육성과 검수·검정제도 신설로 각각 314개, 1,281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더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해양건설업 분야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8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타 분야를 포함한 약 3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중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는 1,376개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반면 3만 7,906개의 일자리는 타 분야에서 창출되는데, 항만재개발 추진 및 거점마리나 개발 등을 통해 일반건설 분야에 약 2만 9,000명, 항만재개발 완공 후 기업입주를 통해 상업 및 관광 분야 약 9,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수산업에서는 6년 동안 총 1조 1,872억 원을 투자하여 1만 9,692개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어촌특화발전, 귀어귀촌 활성화 등을 통해 귀어인을 포함한 귀어일자리 7,260개와 수산창업지원센터 확대 등 수산창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5,0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첨단양식 기술이 개발되면서 양식산업이 첨단화·규모화 됨에 따라 1,131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어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으로 각각 1,565개, 4056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폐어구 수거사업 등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약 660명이 고

¹⁵⁾ 전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수 화물수송을 위해 국가안보선대를 국가에서 보유 및 운영하는 제도

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레저·관광, 해양자원개발 등 기타 해양산업은 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여 4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위해 총 9,295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6,456개로 해양관광·레저업 약 3,000개, 해양자원개발업 약 800개, 해양장비·기기 제조업 약 2,000개, 해양산업 창업으로 약 1,000개가 발생할 것이다.

〈표 2-4〉 해양수산부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단위: 개)

구분		일자리
해운·항만 물류업	해운-조선 상생 및 해운산업 지원체계 구축	702
	항만 물동량 확대를 통한 운영인력 확충	3,386
	해양산업클러스터육성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1,680
	선용품산업 및 검수·검정 산업 육성	1,595
	소계	7,363
해양건설업	항만인프라 재정투자를 적정 규모로 유지 ¹⁶⁾	.
	항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규모 확대	1,376
	타 분야(일반 건설 분야, 항만시설 운영 일자리 창출)	37,906
	소계	39,282
수산업	귀어·귀촌 활성화 및 창업지원 강화	12,280
	양식산업의 첨단화·규모화	1,131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 육성	5,621
	어업자원 확보 및 어장 환경 개선	660
	소계	19,692
기타 해양산업	해양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2,815
	해양자원개발 산업 육성(해양심층수, 해양바이오)	791
	해양장비·기기 제조업(해양플랜트, 수중건설로봇, e-Navi 등)	1,864
	해양산업 창업 지원	986
	타 분야(마리나·배후부지 입주, R&D 산업지원센터 건설 등)	40,523
	소계	46,979
합계		113,316

제3절 소결

일자리위원회는 향후 5년간 현장민생공무원 17만 4,000명, 사회서비스 분야 34만 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공기업·산하기관의 부족인력 충원 등으로 30만 명이 충원되는 등 총 약 81만 개의 공공일 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대 주력 제조업에 신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일자리를 대규모로 발굴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융복합한 친환경·스마트카,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의 신산업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의 증가로 환경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등 보건산업의 일자리도 확대될 것이다. 게다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의료관광·MICE 등 새로운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산업의 일자리도 육성할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정책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 3,177개, 민간부문 3만 4,887개로 3만 8,06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타 분야의 7만 8,429개까지 포함해 총 11만 6,49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16) 항만인프라 재정투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함으로써 해양건설 일자리 감소 방지

〈표 2-5〉 해양수산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

(단위: 개)

구분		일자리 창출 계획		
		해양수산 분야	타 분야	합계
공공부문	정부	718	-	718
	산하기관	2,459	-	2,459
	소계	3,177	-	3,177
민간부문	해운·항만물류업	7,363	-	7,363
	해양건설업	1,376	37,906	39,282
	수산업	19,692	-	19,692
	기타 해양산업	6,456	40,523	46,979
	소계	34,887	78,429	113,316
합계		38,064	78,429	116,493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안), 2017.8을 토대로 재작성

일자리위원회가 제시한 81만 개의 공공일자리 중에는 해양경찰·해양구조대, 해군부사관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분야가 많다. 민간부문에서 제시한 분야 역시 해양수산과 연관되어 있다. 친환경·스마트카 뿐만 아니라 친환경선박·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며, 해양환경, 해양바이오 의약품, 해양치유, 해양금융, 해양관광 등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해양수산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역으로 해양수산 분야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또는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일자리위원회에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도 자체 일자리 창출 계획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 또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거나 조기 실현이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여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단지 해양수산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3장

고용효과 산출방법 고찰 <<

제1절 고용영향평가 개요

1. 고용영향평가 제도

‘고용영향평가(Employment Impact Assessment)’란 중앙부처나 자치단체가 수립 또는 추진 중인 정책, 사업, 법 또는 제도 등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용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개선안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시행되었다. 또한 2013년 이후 정부는 고용영향평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한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평가 인력을 확충하고 ‘고용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였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1568호 일부개정 2012. 12. 18.)

제13조 (정책의 분석·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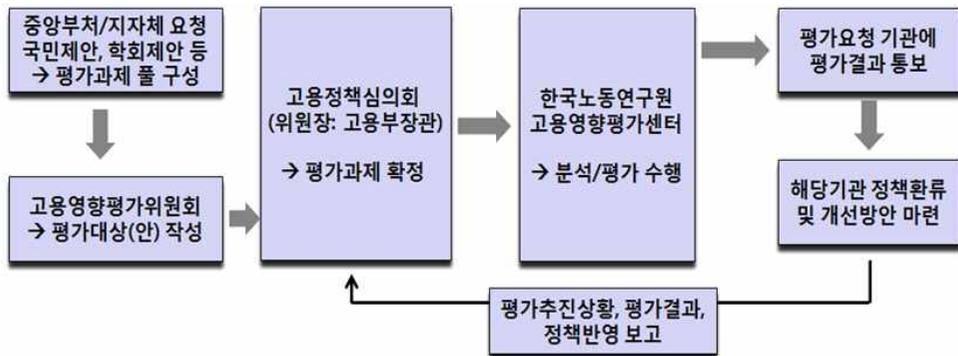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석·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분석·평가하기로 심의한 정책

2011년부터 시행된 정책 심층 고용영향평가에서는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제도, 규제 개선 정책, 민간단체 및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과제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대규모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165개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각 부처는 평가에서 나타난 정책제언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고용노동부는 과제별 정책제언 반영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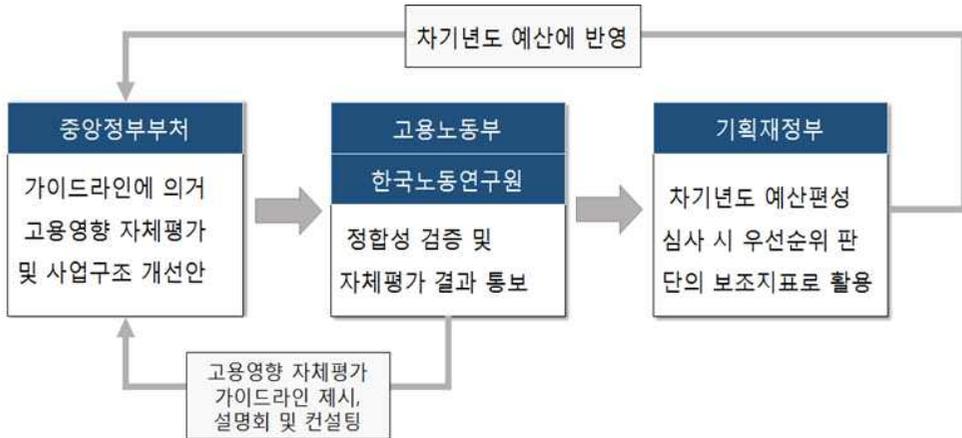
[그림 3-1] 정책 심층 고용영향평가 절차



자료 : 오상훈, 고용영향평가 제도 및 방법론, 2017.9(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자료)

한편, 2016년부터 도입된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는 각 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군), 각 부처 신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4개 부처 재정지출사업에 대해 2016년 185개, 2017년 3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약 1,000개 사업을 평가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는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의거 고용의 양, 제도 개선 방안 등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은 컨설팅 및 적합성을 검증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차기년도 예산편성 심사 시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그림 3-2]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



자료 : 오상훈, 고용영향평가 제도 및 방법론, 2017.9(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자료)

고용영향 자체평가의 최종 보고 내용에는 각 예산사업 단위뿐 아니라 사업 세부유형별·부처별 고용창출효과(예산 10억 원당 고용효과 포함)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 4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여 중앙정부 관계부처 사업담당자가 개별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각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6년 말 고용효과 산출을 위한 평가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통해 2017년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발표하였다.

2. 고용효과 산출 원칙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2017년 배포한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효과 산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용효과는 고용형태 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취업자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출하며, 취업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가령 1명이

6개월만 고용될 경우 0.5명으로 환산되고, 동일한 1명이 2년간 고용될 경우 2명으로 환산된다.

둘째, 예산지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재정사업의 고용효과로 산출한다. 직접고용 효과는 재정지출사업의 인건비 지출에 해당하며, 간접고용이란 정부의 사업비 지출(정부 구매·조달)로 인해 산업별 제품·서비스 수요가 증가되면서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양을 의미한다.¹⁷⁾ 다만 직접일자리사업을 제외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사업 유형)의 경우 ‘일자리사업 고용효과’를 별도 산출한다. 기타 사업유형(단일 예산항목 SOC사업, 용자사업, ODA사업, R&D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산출식으로 고용효과를 산출한다.

셋째, 직접고용 효과는 인건비 총액을 해당 산업의 근로자 연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산업별 연평균임금¹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인당 연평균 임금총액을 사용한다.

넷째, 간접고용 효과는 인건비 이외의 각 사업비 지출액을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¹⁹⁾(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원칙적으로는 각 예산비목을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다만 예산이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이전(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교부금,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등 단일비목으로 구성된 경우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평균지출액²⁰⁾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섯째, 기존 사업은 당해년도와 차년도의 예산사업 고용효과를 모두 산출하고, 차년

17) 직접고용, 간접고용, 유발고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고용효과	정의
직접고용(Direct Jobs)	정부의 인건비 지출로 직접 고용한 고용효과
간접고용(Indirect Jobs)	정부의 사업비 지출이 산업수요 증가로 파급되면서 증가한 고용효과
유발고용(Induced Jobs)	정부의 인건비지출 또는 이전지출의 2차 효과로서 가계소비성향 만큼 소비지출로 파급되어 나타난 고용효과

18) <표 1>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근로자 임금(2016) 참조

19) <표 2>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참조

20) <표 3>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참조

도 예산사업의 고용효과와 당해년도 고용효과의 차이(순 고용)를 제시한다.

여섯째, 산출내역별 고용효과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사업별 총 고용효과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시한다.

제2절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산출 방법

1. 일반 재정지출 사업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는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산출)과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산출)을 각각 계산하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직접고용효과 산출식은 다음의 <식 1-1>과 같다.

$$\langle \text{식 1-1} \rangle \text{ 직접고용효과} = \text{인건비 총액} \div \text{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인건비에는 상용보수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연금지급금, 고용부담금 등 부대경비도 포함된다. 또한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은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산업별 근로자 임금을 활용하되 산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평균값을 활용한다. 간접고용효과 산출식은 다음의 <식 1-2>와 같다.

$$\langle \text{식 1-2} \rangle \text{ 간접고용효과} = \text{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div \text{예산비목별 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예산비목'을 적용한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사례는 아래의 <표 3-1>과 같다. 직접고용효과는 인건비 항목, 즉 상용임금과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에 부록 <표 1>의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0.2628을 나눠서 산출한다. 간접고용효과는 인건비를 제외한 각각의 항목을 토대로 부록

〈표 2〉의 계수를 나눠서 산출한다.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예산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전체 고용효과는 직접고용효과와 간접고용효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표 3-1〉 일반 재정지출 사업(예산비목 적용) 예시

(단위: 명, 억 원)

	구분	실적(목표치)	'18년 예산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 비목별		103.3
	▪ 상용임금(110-03)		43
	▪ 일반수용비(210-01)		13
	▪ 공공요금(210-02)		10
	▪ 복리후생비(210-12)		0.8
	▪ 국내여비(220-01)		19
	▪ 업무추진비(240-01)		0.5
	▪ 고용부담금(320-09)		8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 인건비 항목	상용임금(43억 원) + 복리후생비(0.8억 원) + 고용부담금(8억 원) = 51.8억 원	
	A.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51.8억 원) ÷ 0.2628* = 197.1명 * 〈표1〉 사업지원서비스 0.2628 적용	
	B. 간접고용효과 : a + b + c + d = 37.3명		
	a. 일반수용비 → 〈표2〉 일반수용비	* 13억 원 ÷ 0.94 = 13.8명	
	b. 공공요금 → 〈표2〉 공공요금	* 10억 원 ÷ 5.13 = 1.9명	
	c. 국내여비 → 〈표2〉 국내여비	* 19억 원 ÷ 0.88 = 21.6명	
	d. 업무추진비 → 분석제외	* 분석제외	
	A + B = 234명		

자료 : 오상훈, 고용영향평가 제도 및 방법론, 2017.9(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자료)

‘지출내역’을 적용한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사례는 아래의 <표 3-2>와 같다. 비목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효과는 없으며, 지출내역별로 부록 <표 3>의 계수를 나눠줌으로써 간접고용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표 3-2> 일반 재정지출 사업(지출내역 적용) 예시

(단위 : 명, 억 원)

	구 분	실적(목표치)	'18년 예산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 세부내역별		16.5
	▪ 기항지 Port Sales 활동		3
	▪ 국내 크루즈 수요창출(방송홍보)		3.5
	▪ 크루즈 국제행사(박람회개최)		3
	▪ 크루즈선용품 수출지원		5
	▪ 크루즈 전문인력 취업컨설팅지원		2
	□ 비목별		16.5
	▪ 일반수용비(210-01)		2
	▪ 관리용역비(210-15)		14.3
	▪ 국외업무여비(220-02)		0.15
	▪ 사업추진비(240-01)		0.03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항목이 없음		
	B. 간접고용효과 : a + b + c + d + e = 29명		
	a. 기항지 Port Sales 활동 → <표3> 광고홍보비	* 3억 원 ÷ 0.51 = 5.9명	
	b. 국내 크루즈 수요 창출 → <표3> → <표4> 문화및기타서비스	* 3.5억 원 ÷ 0.72 = 4.9명	
	c. 크루즈 국제행사 → <표3> 광고,홍보비	* 3억 원 ÷ 0.51 = 5.9명	
	d. 크루즈 전문인력 취업 컨설팅지원 → <표3> 교육및인력양성	* 2억 원 ÷ 0.72 = 2.8명	
	e. 크루즈 선용품 수출지원 → <표3> 컨설팅비	* 5억 원 ÷ 0.51 = 9.8명	
A + B = 29명			

자료 : 오상훈, 고용영향평가 제도 및 방법론, 2017.9(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자료)

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OECD 노동시장 프로그램 분류기준에 따라 직접 일자리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인력양성) 사업, 고용서비스(취업알선) 사업, 고용장려금 사업, 창업지원 사업 등 6개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세부유형별 고용효과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직접 일자리 사업

직접 일자리 사업은 구직자를 민간기업,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임금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 제공 사업이다. 사회공헌형 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등 은퇴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실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봉사형 일자리 사업도 포함된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고용효과는 일반 재정지출 사업과 동일하게 직접고용효과(<식 2-1>)와 간접고용효과(<식 2-2>)를 각각 계산하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langle \text{식 2-1} \rangle \text{ 직접고용효과} = \text{인건비 총액} \div \text{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langle \text{식 2-2} \rangle \text{ 간접고용효과} = \text{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div \text{예산비목별 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직접 일자리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사례는 부록의 <표 7>과 같다. 비목별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는 활동비와 부대경비로 인건비성 항목에 해당되므로 부록 <표 1>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계수 0.2418을 적용하여 직접고용효과를 산출한다. 비목별 예산 중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는 부록의 <표 2>를 활용하여 고용효과를 산출하고 사업추진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인력양성)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은 실업자,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에 위탁하여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단, 특성화대학과정운영, 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해 R&D·연구비·기자재·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성격의 교육사업은 제외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고용효과는 직·간접고용효과(<식 2-3>)와 일자리사업 고용효과(<식 2-4>)를 각각 계산하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추가 고용 기여율은 기존실적을 활용하여 추정하되, 개별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0.35를 적용한다.²¹⁾

<식 2-3> 직·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식 2-4>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훈련인원 × 취업률 × 1년 고용유지율 × 추가 고용기여율

직업능력개발훈련(인력양성)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사례는 부록의 <표 8>과 같다. 재정지출 고용효과는 사업내역별 예산과 부록 <표 3>의 해당항목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일자리사업 고용효과는 훈련인원과 취업률, 1년 고용유지율, 추가고용기여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취업률과 1년 고용유지율은 개별적으로 추정한 자료를 활용한다.

3) 고용서비스(취업알선) 사업

고용서비스 사업은 사업주, 구직자,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정보 제공, 일자리 알선, 개인 구직활동비 지원, 취업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용서비스 사업의 고용효과는 직·간접고용효과(<식 2-5>)와 일자리사업 고용효과(<식 2-6>)를 각각 계산하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1년 고용유지율의 경우 기존실적을 활용하되, 기존실적이 없는 경우 청년대상

21) 강순희 외, 직업능력훈련 분야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2016

0.698, 중장년대상 0.776, 경력단절여성대상 0.785, 기타 0.758을 적용한다. 추가 고용기여율은 청년대상 0.252, 중장년대상 0.386, 기타 0.340을 적용한다.²²⁾

$$\langle \text{식 2-5} \rangle \text{ 직·간접고용효과} = \text{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text{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langle \text{식 2-6} \rangle \text{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text{훈련인원} \times \text{취업률} \times \text{1년 고용유지율} \times \text{추가 고용기여율}$$

고용서비스(취업알선)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사례는 부록의 <표 9>와 같다. 재정지출 고용효과는 사업내역별 예산과 부록 <표 3>의 해당항목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일자리사업 고용효과는 취업알선인원과 취업률, 1년 고용유지율, 추가고용기여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취업률과 1년 고용유지율은 개별적으로 추정한 자료를 활용한다.

4) 고용장려금 사업

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점 해소 등을 목적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는 직·간접고용효과(<식 2-7>)와 일자리사업 고용효과(<식 2-8>)를 각각 계산하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추가 고용기여율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0.1311, 장년고용지원 0.011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0.0975, 고용유지지원금 0.0634, 기타 0.0734를 적용한다.²³⁾

$$\langle \text{식 2-7} \rangle \text{ 직·간접고용효과} = \text{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text{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langle \text{식 2-8} \rangle \text{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text{지원대상 인원} \times \text{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times \text{추가 고용기여율}$$

22) 최강식 외, 고용서비스 분야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2016

23) 이근희 외, 일반사업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2016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사례는 부록의 <표 10>과 같다. 사업내역별 예산과 부록의 <표 4>를 이용하여 재정지출 고용효과를 산출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사업 고용효과는 지원대상 인원과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은 개별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한다.

5) 창업지원 사업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 또는 창업 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 사업의 고용효과는 직·간접고용효과(<식 2-9>)와 일자리사업 고용효과(<식 2-10>)를 각각 계산하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1년 후 생존율은 기존실적, 실태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되, 개별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0.901을 적용한다. 창업기업당 추가고용효과는 창업교육 0.149, 시설·공간 0.441, 멘토링·컨설팅 0.133, 사업화지원 0.092, 정책자금 0.098, R&D지원 0.181, 판로·마케팅·해외진출지원 0.110, 창업행사·네트워크 0.152, 기타 0.114를 적용한다.²⁴⁾

<식 2-9> 직·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식 2-10>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지원업체 수 × 창업률 × 1년 후 생존율 × 창업기업당 추가고용효과

창업지원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사례는 부록의 <표 11>과 같다. 사업내역별 예산과 부록의 <표 4>를 이용하여 재정지출 고용효과를 산출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사업 고용효과는 지원업체 수와 창업률, 1년 후 생존률, 기업당 추가고용효과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창업률과 1년 후 생존율은 개별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한다.

²⁴⁾ 남재량 외, 창업지원사업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2016

3. 기타 사업

기타 사업유형에는 단일 예산항목 SOC사업, 융자사업, ODA사업, R&D사업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산출식으로 고용효과를 산출한다. 각 세부유형별 고용효과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예산항목 SOC사업

SOC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정지출 사업과 동일하게 산출하나, 예산항목 과목이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교부금,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등 단일항목으로 되어 있을 경우 직접고용효과(〈식 3-1〉)와 간접고용효과(〈식 3-2〉)를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langle \text{식 3-1} \rangle \text{ 직접고용효과} = \text{단일 예산항목 지출} \times \text{직접고용비율} \div \text{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직접고용비율은 주거용건물 0.26, 비주거용건물 0.24, 건축보수 0.30, 교통시설건설 0.28, 일반토목시설건설 0.31, 산업시설건설 0.26, 기타건설 0.27, 건축토목관련서비스 0.39를 적용한다.²⁵⁾

$$\langle \text{식 3-2} \rangle \text{ 간접고용효과} = \text{단일 예산항목 지출} \times (1 - \text{직접고용비율}) \div \text{예산비목별 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단일 예산항목 SOC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사례는 부록의 〈표 12〉와 같다. 지출내역별 예산과 부록의 〈표 1〉을 이용하여 직접고용효과 산출한다. 간접고용효과는 부록의 〈표 1〉, 〈표 4〉의 계수를 이용해 산출하는데, 직접고용효과는 제외하고 산출해야 한다. 직접과 간접을 더한 값이 전체 재정지출 고용효과이다.

²⁵⁾ 오상훈 외, SOC 분야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2016

2) 용자사업

용자사업의 고용효과는 재정지출 고용효과(〈식 3-3〉)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이자율 차는 시중 회사채수익률과 용자사업 연 대출이자율의 차를 적용한다.²⁶⁾

$$\langle \text{식 3-3} \rangle \text{ 재정지출 고용효과} = \text{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text{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times \text{정부 용자기여율} (= \text{상환기간 계수}^{27}) + \text{이자율 차} \times \text{이자율 차 계수}^{28})$$

용자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사례는 부록의 〈표 13〉과 같다. 용자사업의 고용효과는 간접고용효과와 정부용자기여율을 곱해 산출한다. 간접고용효과는 부록의 〈표 4〉를 이용하고, 정부용자기여율은 용자조건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3) ODA 사업

ODA 사업의 고용효과는 재정지출 고용효과(〈식 3-4〉)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ODA관련 한국인 채용인원은 해당 국제분담금을 납부한 국제기구의 한국인 참여자 수와 해당 국제분담금 관련 프로젝트, 지역사무소 등의 한국인 채용인원을 연간고용비율로 환산한 인원을 적용한다.²⁹⁾

$$\langle \text{식 3-4} \rangle \text{ 재정지출 고용효과} = \text{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text{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text{ODA관련 해외 한국인채용인원}$$

ODA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사례는 부록의 〈표 14〉와 같다. 직접고용효과는 ODA 사업단의 인건비와 부록 〈표 1〉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계수 0.5864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간접고용효과는 부록 〈표 3〉의 계수를 이용한다.

26) 오상훈 외,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2016

27) 〈표 5〉 상환기간 계수 참조

28) 〈표 6〉 이자율 차 계수 참조

29) 정진호 외, ODA 사업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2016

4) R&D 사업

R&D 사업의 고용효과는 일반 재정지출 사업과 동일하게 직접고용효과(〈식 3-5〉)와 간접고용효과(〈식 3-6〉)를 각각 계산하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식 3-5〉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식 3-6〉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제3절 소결

1. 고용효과 산출기준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분석원칙으로는 첫째, 취업자 수가 아닌 고용자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취업자는 무급종사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과다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용자 수는 1년 단위로 환산해야 한다. 즉 1년 미만인 경우 1년 단위로 환산을 해야 과다 추정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 예산만 고려해야 한다.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 중앙정부 이외의 기여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체 고용효과 분석 시는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정부 예산과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⁰⁾

분석절차로는 가장 먼저 사업유형을 판단해야 한다. 사업유형에 따라 분석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세부사업비 내역을 확인해 인건비와 경비로 구분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산출방식’에 의거 고용효

³⁰⁾ 본고에서는 전체 사업에 대한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포함하되 정부재정(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과 민간투자로 구분하여 분석

과를 추정하면 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치가 필요하다. 산업별 근로자 임금, 1인 고용 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은 매년 갱신되므로 최근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고용효과 산출방법

제2절에서 제시한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산출 방법을 종합하면 <표 3-3>과 같다. 일반적으로 직접고용효과와 간접고용효과는 합산하여 전체 고용효과로 산출하지만, 일자리사업의 경우 직·간접고용효과와 구분하여 표현한다. 일자리사업 추진 이후에 장기적이고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고용효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 항목 중 일부³¹⁾와 ODA 사업의 ODA관련 해외 한국인재 용인원은 개별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31) 취업률, 1년 고용유지율,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1년 후 생존율이 해당함

〈표 3-3〉 사업유형별 고용효과 산출 산식(종합)

사업유형		산식 구분	적용 산식
일반 재정지출 사업(①+②)		①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일반 재정지출 사업과 동일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업	①	직·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②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훈련인원 × 취업률 × 1년 고용유지율 × 추가 고용기여율
	고용서비스 사업	①	직·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②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훈련인원 × 취업률 × 1년 고용유지율 × 추가 고용기여율
	고용장려금 사업	①	직·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②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지원대상 인원 ×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 추가 고용기여율
	창업지원 사업	①	직·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②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지원업체 수 × 창업률 × 1년 후 생존율 × 창업기업당 추가고용효과
	기타	단일 예산항목 SOC사업	①
②			간접고용효과 = 단일 예산항목 지출 × (1 - 직접고용비율) ÷ 예산비목별 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사업	융자사업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정부 융자기여율(= 상환기간 계수 + 이자율 차 × 이자율 차 계수)	
	ODA사업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ODA관련 해외 한국인채용인원	
	R&D	일반 재정지출 사업과 동일	

제4장

해양수산 정책과제 고용효과 분석 <<

제1절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1. 해양수산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와 10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해양수산부 주관 과제로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62번),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실현(80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84번) 등 3개가 선정되었다.

해양수산 3대 국정과제 중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는 해양영토 수호, 불법조업 근절, 섬 관리 강화, 해양안전 강화, 해양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실현’은 한국해운 재건, 해운·조선 상생협력, 수출입 화물 안정적 운송, 물류망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은 우리 바다 되살리기,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선정되었다.

한편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이 있는 타부처 협조과제도 20개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16번)’은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과제이나 해양수산부도 관련이 있다. 해양수산 분야가 해양환경, 해양영토 관리, 해양안전 관리 등 공공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수산업은 다양한 산업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관광, 수산, 항만 등은 지역기반의 산업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처럼 해양수산 분야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다 보니 타부처 주관과제이나 해양수산부의 직·간접적인 협조가 필요한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 국정과제 현황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해양수산부 주관	타부처 협조
국민이 주인인 정부		3	20
더불어 살리는 경제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전략 3 : 시민과 동반성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고용부) 32. 국가기간교통신용 공공성강화 및 국토교통사업 경쟁력 강화(국토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산업부·미래부·국토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산업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5 :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안전처)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환경부·식약처) 60. 달린전 단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환경부) 73. 관공복지 확대와 관공산업 활성화(문체부) 78. 한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산업부·국토부·행자부)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농식품부)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활일 구현(통일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외교부) 100. 보후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산업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60. 해운·조선 성장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60.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안전처) 68.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부)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설한 이형체계 구축(환경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국토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정방역 증진확산(농식품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개방형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외교부)

주 :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해양수산 과제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

2. 해양수산 정책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신정부의 정책공약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내 과제발굴 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정부에서 추진할 ‘신정부 해양수산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들 정책과제는 총 87개(부록의 <표 7> 참조)이며,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제조업 부흥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국익우선 협력외교, 평화통일,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생활안전 강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 지역 발전 등 해양수산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과제는 [그림 4-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3개의 해양수산부 주관과제와 20개 타부처 협조과제와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MI에서 수립한 ‘신정부 해양수산 정책과제’ 중 사업의 중요도, 사업 규모, 실현가능성 등을 토대로 대표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고용효과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어 관계공무원, 해당분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³²⁾을 통해 14개의 정책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표 4-1〉 고용효과 분석대상 14개 해양수산 정책과제 선정결과

NO	정책과제명	선정기준		
		사업 중요도	사업 규모	실현 가능성
1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	○	○
2	광역 자유무역지대 조성사업	○		○
3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	○	○
4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개선사업	○	○	○
5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		○
6	원양해운 재건사업	○	○	○
7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비즈니스 개발사업	○	○	○
8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사업	○	○	○
9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		○
10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사업	○		○
11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	○	○
12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	○		○
13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	○	○
14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		○

이들 과제는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과 같이 직접 일자리 사업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재정지출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용효과 분석 방법으로는 제3장에서 제시한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추정방식을 적용하였다. 분

³²⁾ 분야별(해양, 수산, 해운, 항만)로 관계공무원 5명, 대학 교수 3명, 연구원 및 기타 2명 등 총 10명씩 전문가를 선정하여 2017.12.7.~12.20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연구진 협의를 거쳐 최종 14개 정책과제 선정

석 기간은 해당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5년 이상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향후 5년으로 제한하였다.

제2절 정책과제별 고용효과 분석

1.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1) 사업내용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국내 제조 및 물류기업의 원활한 현지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글로벌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에 파견 및 정착시키는 것이다. 해외에 진출한 제조 및 물류기업은 현지에서 국내 물류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어려움에 따른 현지 물류인력 활용으로 물류흐름의 병목현상 발생과 이에 따른 기업의 현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활동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및 물류기업 117개사를 대상으로 한 KMI(2017)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64%가 진출 국가 내에서 한국계 포워더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현지 포워더를 이용할 경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부족하고 늦은 업무처리, 전문성 부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현지 외국 포워더 이용 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국내 물류전문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향후 국내 물류전문인력의 파견 사업 추진 시 이용 의향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9%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조사된 것이 이러한 점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해외 현지의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물류전문인력, 즉 포워더를 양성하고, 인력 수요가 있는 해외 진출 기업에 파견 및 정착시키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 크게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인력의 육성 및 파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물류전문인력의 현지에 정착하여 현지 물류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다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한 물류거점 등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욱 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국내 일자리에 한정하기보다는 해외 일자리로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국내 물류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주요 문제 중의 하나로 제기되는 사후관리와 실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의 육성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향상과 수출 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등 국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크게 기여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신규 핵심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은 인력양성과 현지 정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2) 개략 사업비 산출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은 국내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제조 및 물류기업으로 파견하고, 현지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2가지 사업이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는 국내에서 해외 현지의 언어 및 문화, 실무 등을 교육하여 물류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둘째는 육성한 물류전문인력을 해외 현지에 파견·정착시키는 사업이다.

첫 번째 사업은 해외 현지 여건, 문화 및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민간물류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토교통부의 글로벌 물류양성사업 등이 있으나 주로 이론 중심의 사업이며, 사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민간물류전문가 중심, 연간 배출하는 전문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연간 1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사업의 경우 해외 진출 및 정착을 위한 인건비와 정착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물류인력의 해외진출 및 정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인당 4,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MI, 2017). 연간 소요 비용은 KMI(2017)에서 조사된 연간 필요 수요 인력을 고려하면 연간 859억 원(4,200만원/인×2,046명/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은 프로그램 개발, 예산 작업 등의 기간으로 간주하여 실제 예산의 투입은 2019년부터 시작하고, 전체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2〉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			959	959	959	959	3,836
사업별	인건비		859	859	859	859	3,436
	아카데미		100	100	100	100	400
	소계		959	959	959	959	3,836
출처별	정부재정		959	959	959	959	3,836
	민간투자						
	소계		959	959	959	959	3,836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비와 물류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및 정착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접 일자리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고용 효과는 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 고용효과와 ②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의 합으로 산정한다. 우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 고용효과는 물류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및 정착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른 효과에 해당하고,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에서 창출되는 고용효과로 볼 수 있다. 직접고용에 적용되는 해당 산업의 연평균 임금은 실제 진출 시 물류기업에 수요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운수업 전체 계수를 적용하였으며, 간접고용에서의 지출내역별 1인당 고용창출 위한 평균 지출액은 인력양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교육서비스 계수를 적용하였다.

〈표 4-3〉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단위: 억 원, 명)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구분	'18	'19	'20	'21	'22	계
	□ 비목별			959	959	959	959
■ 인건비			859	859	859	859	3,436
■ 아카데미(교육비)			100	100	100	100	400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3,436억 원) ÷ 0.3783* = 9,082.7명						
	* 〈표 1〉 운수업 전체 0.3783 적용						
	B.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400억 원) ÷ 0.72* = 555.6명							
* 〈표 3〉 교육서비스 0.72 적용							
A + B = 9,638.3명/(4년)							

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한 창출되는 고용 효과는 2022년까지 직접고용 9,083명, 간접고용 556명 등 총 9,638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고용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원 당 효과로 분석해보면, 예산 10억 원당 직접고용은 23.7명, 간접 고용은 1.4명 등 고용 창출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해외 파견 및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방식에서 기인하며, 실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제조 및 물류기업의 물류전문인력 수요가 높다는 점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억 원)			959	959	959	959	3,836
총 고용 (명)	직접고용		2,270.7	2,270.7	2,270.7	2,270.7	9,082.7
	간접고용		138.9	138.9	138.9	138.9	555.6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		23.7	23.7	23.7	23.7	23.7
	간접고용		1.4	1.4	1.4	1.4	1.4

주 : 2018년은 제도 도입을 위한 기간으로 고용창출에서 제외

2. 광역 자유무역지대 조성사업

1) 사업내용

현재 항만구역에는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에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유무역지역은 매우 한정된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제조 및 물류기업의 수요와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파격적인 제도 개선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부가가치 활동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과 비교 가능한 일본의 국제전략특구와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를 비교해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 및 차이점은 그 범위와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범위의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제한된 특정 구역의 특구가 아닌 도시보다 큰 개념의 광역 또는 권역개념의 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도쿄권(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전역, 치바현의 나리타시 일대 권역을 지정), 간사이권(교토부오사카부효고현 등으로 구성) 등 는 우리나라의 몇 개 시도 전체를 특구로 지정하고 산업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도 상하이 120.7km², 텐진 119.9km², 광둥 116.2km² 등 광

범위한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특정 구역을 제한하고, 지역적 분산 지정의 특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수단의 차이이다. 중국 및 일본은 중점 산업을 지정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 지급, 전체 권역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기존의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보다 광역화된 개념의 자유무역지대 지정이 필요하다. 즉,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을 중심으로 하되 부산권, 광양만권, 인천권 등 시도 단위의 자유무역지대를 지정·운영해야 할 것이다.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3개 지역을 시범 자유무역지대로 지정·운영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산업 육성, 국가경제 발전,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의 실질적인 기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 개략 사업비 산출

광역화된 자유무역지대 지정은 신규 사업비의 투입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존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개선·통합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즉, 입주 기업이 희망하는 입지, 규모 등에 따라 신규로 부지를 조성하거나 개발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가정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사업비의 투입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대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 산출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은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더 많고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을 위한 재원투자, 교육을 위한 지원 등의 신규 예산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물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개발 등을 통한 정부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현 단계에서 가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는 투입 사업비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고용창출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특성에 맞게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효과 산정에 대해서는 고용영향 평가에서도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자유무역지대 지정·운영에 따른 고용효과도 사업비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치목표 기업 수 및 기업 당 예상되는 고용창출을 기준으로 직접고용에 대해서만 추정한다. 또한, 구체적인 지정 면적, 입주 기업의 종류, 입주 기업 수, 기업당 고용 창출 능력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명확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가정하여 산정한다.

시범적으로 지정이 필요한 3개 자유무역지대에서 연간 10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당 50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연간 1,500명(3개(자유무역지대) × 10개(연간 신규 유치 기업 수/자유무역지대) × 50명(연간 기업당 일자리 창출 규모³³⁾) = 연간 1,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외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유무역지대 개념을 도입하면 최소 10개 이상의 기업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고용 창출효과는 그 어떤 일자리 사업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33) 2016년 기준 국내 4대 항만배후단지의 기업 당 평균 고용은 47명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보다는 조금 높은 고용 창출을 가정

〈표 4-5〉 광역 자유무역지대 조성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억 원)							
총 고용 (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1,500	1,500	1,500	1,500	6,000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주 : 2018년은 제도 도입을 위한 기간으로 고용창출에서 제외

3.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1) 사업내용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은 전국 항만시설 중 유휴시설(특히, 부두시설)을 해양 산업의 육성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그 간 부두시설에는 제도적으로 제조기업이 입지하여 경영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항만물동량 증가율의 감소, 신항의 개발, 이에 따른 유휴 부두시설의 증가와 해양관련 기업의 부두시설 이용 요구 증가 등을 반영하여 장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관련 산업이 유휴 부두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양관련 기업 및 연관기업을 집적화시켜 물류비 절감과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부산항 및 광양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월 지정·고시 되었다. 현재는 시범사업 형태로 유휴 부두시설이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만을 지정하였으나, 향후 유휴 부두시설이 발생하고 기업의 입주수요가 있을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부두시설만을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최근 인접지역까지 연계 개발하고, 지원제도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개략 사업비 산출

부산항 및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최근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투입예산이 확정되었다. 광양항은 1,383억 원, 부산항은 277억 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18~2019년 기간 동안 총 1,660억 원의 투입이 예상된다. 그 중 2018년에는 실시설계 등 주로 설계비와 기반시설을 위한 일부 공사비만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 투자비의 20%인 332억 원을 배정하고, 2019년은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인 1,328억 원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비의 분담 기준인 정부 22.2%, 지자체 21.7%, 항만공사 56.1%를 일괄 적용하였다. 아울러 기반시설 공사 이후 상부 시설은 입주 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기업별 공사비 산출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표 4-6〉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		277	1,383				1,660
사업별	부산항	55	277				332
	광양항	222	1,106				1,328
	소계	277	1,383				1,660
출처별	정부재정	61	307				368
	지자체	61	300				361
	항만공사	155	776				931
	소계	277	1,383				1,660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 방식은 2가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그 이유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 시 창출되는 고용효과와 기반시설 공사 이후 해양관련 기업 입주에 따른 고용효과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

선 기반시설 공사 시 창출되는 고용은 '단일 예산항목의 SOC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기업입주 시 창출되는 고용효과는 2020년부터 입주 가능한 기업 수요와 기업 당 고용인력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고용효과는 재정투입을 통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고용효과와 해양산업 입주를 통해 창출되는 고용효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우선, 부산항과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단일 SOC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총 1,921명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건설 사업 기간 중의 고용이기 때문에 단기 고용인력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단위: 명, 억 원)

사업 정보 및 예산 내역	구분	'18	'19	'20	'21	'22	계
	□ 예산비목						
■ 일반 재정지출		332	1,328				1,660
□ 지출내역							
■ 기반시설 조성		332	1,328				1,660
일자리 창출 경로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단일 예산항목 지출(1,660억 원) × 0.31* ÷ 0.4594** = 1,120.2명						
	* 일반토목건설 0.31 적용						
	** 〈표 1〉 종합건설업 0.4594 적용						
B. 간접고용효과							
▶ 단일 예산항목 지출(1,660억 원) × (1-0.31*) ÷ 1.43** = 801.0명							
* 일반토목시설 0.31 적용							
** 〈표 4〉 일반토목시설건설 1.43 적용							
A + B = 1,921.1명/(2년)							

기반시설 공사 이후 기업 입주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입주기업 당 고용 인력으로 산출하였다. 입주가능 기업은 2015년 KMI 조사³⁴⁾에서 도출된 37개사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전국 단위의 조사임을 감안하여 부산항과 광양항에 약

50%의 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간 6개 기업(=37개사×50%÷3년)이 입주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업 당 고용 인력은 동일 조사에서 총 6,210명의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업별로 큰 차이가 있어 평균 고용 예상 인력의 50% 수준인 84명(=6,210명÷37개기업×50%)을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간 504명, 3년 간 총 1,512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8〉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억 원)		332	1,328				1,660
총 고용 (명)	직접고용	224.0	896.1	504	504	504	2,632.1
	간접고용	160.2	640.8				801.0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	6.7	6.7				6.7
	간접고용	4.8	4.8				4.8

4.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개선사업

1) 사업내용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를 2018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준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도서지역의 핵심시설인 어항, 포구 등을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낙후된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위한 계류시설 설치, 어촌마을 재생, 어촌관광 수요 창출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본 과업에서는 파손된 접안시설 개선, 여객터미널 건설, 안전시설 개선 등 소형 항포구의 해상교통시설 정비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접안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해상교통시설 정비사업의 경우 그 대상이 명확하고 연간 일정지역에 대한 개선작업이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 및 이에 근거한 고용창출 수준 추정이 용이하고 그 외 사업의 경우

34) 해양수산부,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 2015.12.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개략 사업비 산출

현재 해상교통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역 선정과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상교통시설 개선사업은 그 대상은 많고 개소당 사업비는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간 추진 가능한 개소와 1개소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1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되 1개소당 사업비는 30억 수준으로 적용하였다. 접안시설, 계류시설, 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30억 이상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대상별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했으며, 민간투자, 지자체 투자 등으로는 시설 개선이 되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정부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표 4-9〉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개선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		300	300	300	300	300	1,500
사업별	접안시설정비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	300	300	300	300	300	1,500
출처별	정부재정	300	300	300	300	300	1,500
	민간투자						
	소계	300	300	300	300	300	1,500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 방식은 '단일 예산항목의 SOC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정부재정을 통해 부족한 항만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재정을 통한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항만의 접안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교통시설 건설에 대한 계수를 적용하였다.

고용효과는 연간 5년간 1,90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용

형태는 상시고용과 단기고용의 혼합된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국 관점에서 보면 연간 10개의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상시고용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나 개별 사업 또는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단기 고용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일자리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로 볼 수 있다.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정비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실제 사업 추진 시에도 지역 기반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10〉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개선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단위: 명,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계
사업 정보 및 예산 내역	□ 예산비목					
	■ 일반 재정지출	300	300	300	300	300
	□ 지출내역					
	■ 기반시설 조성	300	300	300	300	300
일자리 창출 경로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단일 예산항목 지출(1,500억 원) × 0.28* ÷ 0.4594** = 914.2명					
	* 교통시설건설 0.28 적용					
	** 〈표 1〉 종합건설업 0.4594 적용					
B. 간접고용효과						
▶ 단일 예산항목 지출(1,500억 원) × (1-0.28*) ÷ 1.09** = 990.8명						
* 교통시설건설 0.28 적용						
** 〈표 4〉 교통시설건설 1.09 적용						
A + B = 1,905.1명/(5년)						

한편 동사업의 예산 10억 원당 고용인원은 직접고용 6.1명, 간접고용 6.6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4-11〉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개선 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억 원)		300	300	300	300	300	1,500
총 고용 (명)	직접고용	182.8	182.8	182.8	182.8	182.8	914.2
	간접고용	198.2	198.2	198.2	198.2	198.2	990.8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	6.1	6.1	6.1	6.1	6.1	6.1
	간접고용	6.6	6.6	6.6	6.6	6.6	6.6

5.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1) 사업내용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이다. 그 중 항만을 끼고 있는 항만도시는 입출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선박 연료유는 일반 경유에 비해 황함유량이 약 3,000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도 선박 및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 선박 및 항만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AMP(육상전원공급장치, Alternative Maritime Power) 설치 사업과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사업을 중심으로 고용효과를 도출하였다. AMP의 설치선박 접안 시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미세먼지 관측망은 항만 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및 향후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개략 사업비 산출

전국 항만에 AMP 설치사업은 2030년까지 총 120개 선석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부터 주요 항만별로 순차적 설치를 가정하여 연간 10개 선석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AMP 1기 설치에 약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적용하였다. 또한 AMP 설치에 정부가 50%, 항만공사를 포함한 민간이 50%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기 관측망의 경우 전국 항만

별로 선박 입출항 빈도가 높은 항만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를 가정할 경우 높은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연간 5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설치비용은 1개소 당 약 3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용하였다. 대기관측망의 경우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은 항만공사가 설치하고, 그 외 항만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으로 설치를 가정하고 일괄 적용을 위해 정부재정이 연간 예산액의 50%를 담당하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표 4-12〉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			350	350	350	350	1,400
사업별	AMP 설치		200	200	200	200	800
	관측망 설치		150	150	150	150	600
	소계		350	350	350	350	1,400
출처별	정부재정		175	175	175	175	700
	민간투자		175	175	175	175	700
	소계		350	350	350	350	1,400

3) 고용효과 분석

고용효과는 AMP 설치 사업과 대기 관측망 설치 사업 모두 설치 시 창출되는 단기 고용과 설치 이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시고용 인력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AMP는 설치 이후 선박과의 연결을 위해 상시고용이 필요하고, 대기 관측망도 설치 이후 측정과 관리를 위한 상시고용이 필요하다.

우선, AMP 및 대기 관측망 설치 시 창출되는 고용은 '단일 예산항목의 SOC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되 사업의 특성에 맞는 고용계수를 적용하였다. AMP의 경우 전기 및 전력과 관련한 고용계수를 적용하고, 대기 관측망은 전자부품과 전자표시장치와 관련한 고용계수를 적용하였다. 산출 결과 4년간 총 853명, 연간 213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고용은 직접고용이 되 시설 설치 시 필요한 단기고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4-13〉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단위 : 명,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계
사업 정보 및 예산 내역	□ 예산비목						
	▪ 일반 재정지출		175	175	175	175	700
	▪ 민간투자(항만공사 등)		175	175	175	175	700
	□ 지출내역						
	▪ AMP 설치 비용		200	200	200	200	800
	▪ 대기관측망 설치 비용		150	150	150	150	600
일자리 창출 경로	〈AMP 설치의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단일 예산항목 지출(800억 원) × 0.27* ÷ 0.7753** = 278.6명						
	* 기타건설 0.27 적용						
	** <표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7753 적용						
	B. 간접고용효과						
	▶ 단일 예산항목 지출(800억 원) × (1-0.27*) ÷ 3.72** = 157.0명						
	* 기타건설 0.27 적용						
	**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3.72 적용						
	〈항만구역의 대기관측망 설치의 재정지출 고용효과〉						
C. 직접고용효과							
▶ 단일 예산항목 지출(600억 원) × 0.27* ÷ 0.5701** = 284.2명							
* 기타건설 0.27 적용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5701 적용							
D. 간접고용효과							
▶ 단일 예산항목 지출(600억 원) × (1-0.27*) ÷ 3.29** = 133.1명							
* 기타건설 0.27 적용							
** 전자표시장치 3.29 적용							
A + B + C + D = 852.9명/(5년)							

다음으로 설치 이후 상시 고용효과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AMP의 경우 3명으로 구성되는 1개조가 3선석을 운영하고 3조 3교대 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연간 10기 설치 시 2019년부터 연간 30명(10기÷3선석×3조3교대(9명))의 상시고용이 필

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항만대기질 관측망의 경우 1개소 당 운영 1명, 기술 4명 등 총 5명의 상시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연간 5개소 설치 시 연간 25명(5개소 × 5명)의 상시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동 사업을 통해 예산 10억 원당 고용효과는 직접고용 4.0명, 간접고용 2.1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4-14〉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억 원)			350	350	350	350	1,400
총 고용 (명)	직접고용		140.7	140.7	140.7	140.7	562.8
	간접고용		72.5	72.5	72.5	72.5	290.1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		4.0	4.0	4.0	4.0	4.0
	간접고용		2.1	2.1	2.1	2.1	2.1

6. 원양해운 재건사업

1) 사업내용

원양해운 재건사업은 국정과제로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담당부처 : 해수부)이 포함된 것과 관련된다. 해운강국 건설은 전례 없는 국정과제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공약이 나온 배경에는 한진해운의 파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관련 국민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의 주요 내용은 한국해운 재건, 해운·조선 상생협력, 수출입 화물 안정적 운송 등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해운 재건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2017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및 2018년 공사 발족 이후 해운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 시행, 2017년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하여 중복노선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재정사업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이 계획되어 있다.

해운·조선 상생협력과 관련된 사업은 2018년부터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 20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총 100척 건조, 2017년부터 친환경·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착수, 2020년 LNG추진선 기반 구축, 2022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 활력 회복 등인데, 이 가운데 연안화물선,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와 관련된 공약은 원양해운 재건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면, 2018년부터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 수출입 화물 안정적 운송과 관련되어서 20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시 화물운송체계 구축,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될 예정이다. 이외에 내용들은 원양해운 재건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원양해운 재건과 관련된 사업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등이다.

국정과제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의 주요 내용

(한국해운 재건) '17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및 '18년 공사 발족 이후 해운 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 시행 '17년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하여 중복노선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

(해운·조선 상생협력) '18년부터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 '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총 100척 건조 '17년부터 친환경·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착수, '20년 LNG추진선 기반 구축, '22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 활력 회복

(수출입 화물 안정적 운송) '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시 화물운송체계 구축,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

(물류망 확충) '17년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 지정 및 '19년 완공, '17년부터 부산북항 상부시설,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 착공

자료 :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4>, (검색일 : 2017.11.12.)

2) 개략 사업비 산출

이 공약과 관련된 사업은 일반 재정지출 사업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기존의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① 선박 및 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 보증, ②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③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④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하여 5조 원으로 결정하였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 1,000억 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주)한국선박해양, (주)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할 계획이다.³⁵⁾ 이후에는 2019년에 4천억 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0억 원씩 자본금을 늘려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용효과 분석을 위해 2018~2022년 기간의 개략 사업비는 전체 연도별 자본금의 2/3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표 4-15〉 원양해운 재건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		20,062	26,083	32,104	32,104	32,104	142,457
사업별	원양해운 재건	20,062	26,083	32,104	32,104	32,104	142,457
	소계	20,062	26,083	32,104	32,104	32,104	142,457
출처별	정부재정	20,062	26,083	32,104	32,104	32,104	142,457
	민간투자						
	소계	20,062	26,083	32,104	32,104	32,104	142,457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그 업무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였

³⁵⁾ 리걸 헤럴드, <http://legalherald.co.kr/archives/17425>, (검색일 : 2017.11.12.).

다. 대상사업은 선박 및 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 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채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이다.

‘지출내역’을 적용한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은 아래의 <표 4-16>과 같다. 비목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효과는 없으며, 지출내역별로 부록 <표 3>의 계수를 나눠줌으로써 간접고용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분석결과 5년 동안 총 11만 6,913명의 직간접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원양해운 재건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단위 : 명, 억 원)					
		'18	'19	'20	'21	'22	계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구분						
	□ 세부내역별	20,062	26,083	32,104	32,104	32,104	142,457
	▪ 선박, 터미널 등 투자 보증	10,000	13,000	16,000	16,000	16,000	71,000
	▪ 중고선 매입 후 채용선 사업	10,000	13,000	16,000	16,000	16,000	71,000
	▪ 해운거래 지원 시황정보 제공	15	20	25	25	25	110
	▪ 노후선박 대체	45	60	75	75	75	330
	▪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2	3	4	4	4	17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항목이 없음						
	B. 간접고용효과 : a + b + c + d + e = 116,913명						
	a. 선박터미널 등 투자 보증 → <표 4> 금융서비스		* 71,000억 원 ÷ 1.22 = 58,196.7명				
	b. 채용선 사업 → <표 4> 금융서비스		* 71,000억 원 ÷ 1.22 = 58,196.7명				
	c. 시황정보 제공 → <표 3> 컨설팅비		* 110억 원 ÷ 0.51 = 215.7명				
	d. 노후선박 대체 → <표 4> 금융서비스		* 330억 원 ÷ 1.22 = 270.5명				
	e.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 <표 3> 사업운영비		* 17억 원 ÷ 0.51 = 33.3명				
A + B = 116,913.0명/(5년)							

예산 10억 원당 고용효과를 분석해 보면, 예산 10억 원당 간접고용은 8.2명 명으로 나타났다.

〈표 4-17〉 원양해운 재건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억 원)		20,062	26,083	32,104	32,104	32,104	142,457
총 고용 (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16,464.7	21,406.0	26,347.4	26,347.4	26,347.4	116,913.0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8.2	8.2	8.2	8.2	8.2	8.2

7.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비즈니스 개발사업

1) 사업내용

4차 산업혁명은 세계 무역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품종 단거리 수송 수요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운을 비롯한 운송 분야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고용 축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직무에 고급 해기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선박관리 비즈니스 육성 방안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해운거래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공유경제 및 온디맨드 경제 등의 기술기반 플랫폼 사업에 대해 해운기업에서 포괄적 시각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마련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다.

둘째, 해운 빅데이터 활용전략 수립이다. 세계 무역, 선박 운항, 상품 거래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대를 배치하고 영업망을 개설하는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장 선점화이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역량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산·학·연·정 협력체계 구축이다. 기존의 산·학·연·정 정책협의체와는 달

리 수평적이고 공정한 협력체제 구축을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은 공유,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거래질서와 환경 구축,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2) 개략 사업비 산출

이 공약과 관련된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해운거래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R&D 사업이 요구된다. 예산 규모는 총 1,364억 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³⁶⁾ 일반 재정지출 사업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 센터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 4-18〉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비즈니스 개발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			44	44	638	638	1,364
사업별	해운거래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		3	3	600	600	1,206
	해운 빅데이터 활용전략 수립		3	3			6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장 선점화		35	35	35	35	140
	산학연정 협력체제 구축		3	3	3	3	12
	소계		44	44	638	638	1,364
출처별	정부재정		44	44	638	638	1,364
	민간투자						
	소계		44	44	638	638	1,364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므로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대상사업은 해운거래 플랫폼 서비스 개발, 해운 빅데이터 활용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장

36) 개략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였음

선점화 전략 수립, 산·학·연·정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세부내역별 예산을 적용한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은 아래의 <표 4-19>와 같다. 인건비 항목이 없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고, 지출내역별로 부록 <표 3>의 계수를 나눠줌으로써 간접고용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분석결과 예산 1,364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총 1,533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비즈니스 개발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단위 : 억 원, 명)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구분	'18	'19	'20	'21	'22	계
	□ 세부내역별			44	44	638	638
■ 해운거래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			3	3	600	600	1,206
■ 해운 빅데이터 활용전략 수립			3	3			6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장 선점화			35	35	35	35	140
■ 산학연정 협력체계 구축			3	3	3	3	12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항목이 없음						
	B. 간접고용효과 : a + b + c + d + e = 1,533명						
	a. 해운거래 플랫폼 → <표 3> 연구개발비				* 1,206억 원 ÷ 0.89 = 1,355.1명		
	b. 해운 빅데이터 → <표 3> 연구개발비				* 6억 원 ÷ 0.89 = 6.7명		
	c. 4차 산업혁명 기술 시장 → <표 3> 연구개발비				* 140억 원 ÷ 0.89 = 157.3명		
	d. 산학연정 협력체계 구축 → <표 3> 연구개발비				* 12억 원 ÷ 0.89 = 13.5명		
A + B = 1,532.6명/(4년)							

예산 10억 원당 고용효과를 분석해 보면, 예산 10억 원당 간접고용은 11.2명으로 나타났다.

〈표 4-20〉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비즈니스 개발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억 원)			44	44	638	638	1,364
총 고용 (명)	직접고용						0
	간접고용		49.4	49.4	716.9	716.9	1,532.6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						0.0
	간접고용		11.2	11.2	11.2	11.2	11.2

8.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사업

1) 사업내용

최근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별 자원발굴을 위해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등의 4개의 지자체를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래해변과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자원의 효능 검증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최적화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적용할 해양치유시설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연구사업과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지역별 특성화된 시설유형이 만들어지고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양휴양자원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해양휴양 및 치유자원의 자사를 통해 분포 현황을 목록화하고 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하고 육성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해양휴양 및 치유자원 조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산·학·연 전문가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조성 및 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다문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양휴양 및 치유 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형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해양휴양 및 치유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역별·지역별 해양치유 자원의 특성을 살려 유형에 따른 해양치유체험센터를 건립하고, 도서 및 연안유휴지, 해수욕장을 활용한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설기반의 확보와 아울러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수급 전망,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치유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마련, 양성기관 지정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2) 개략 사업비 산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발굴과 적정 시설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금 32억 원과 지자체 투자 16억 원을 더한 총 49억 원이 2019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2019년부터 인력과 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작될 예정인데, 인력양성은 매년 30억 원씩, 4개소의 해양치유센터 건립은 개소당 300억 원씩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1〉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		24	110	602	602	30	1,368
사업별	R&D	16	16				32
	자원개발	8	8				16
	인력양성		30	30	30	30	120
	센터건립		56	572	572		1,200
	소계	24	110	602	602	30	1,368
출처별	정부재정	24	110	602	602	30	1,368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이며, '단일 예산항목의 SOC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인력 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총 120억 원의 경우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직·간접고용효과를 산출하였다.

사업 초기 해양치유자원 개발과 시범대상지역별 적정 유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은 R&D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R&D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지자체에서 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16억 원은 정부 R&D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함에 따라 동일하게 R&D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R&D사업의 고용효과 산출은 일반재정지출사업과 동일하게 산출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에 의한 직접고용효과와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로 구분 산출하였다. 사업비 가운데 인건비의 비율이 정확하지 않아 50%를 적용하였으며, 인건비 외 사업비의 항목 또한 정해지지 않아 항목 구분 없이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에서 연구용역비의 계수를 적용하였다. R&D사업에 의한 고용효과는 총 62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4-22〉 해양치유 R&D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단위: 억 원, 명)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구분	'18	'19	'20	'21	'22	계
	□ 비목별		24	24			
■ 상용임금(110-03)		12	12				24
■ 연구용역비(260-01)		12	12				24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24억 원) ÷ 0.6873* = 34.9명						
	* 〈표 1〉 연구개발업 0.6873 적용						
	B.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24억 원) ÷ 0.89* = 27.0명							
* 〈표 2〉 연구용역비 0.89 적용							
A + B = 61.9명/(2년)							

해양치유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총 120억 원은 재정지원사업으로 전액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투입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훈련시설의 확장과 같은 건축비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면 추가 소요는 없을 것이다. 인력양성 프로그램에서 배출되는 해양치유지도사는 400명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인력양성사업에서의 유발되는 고용인원은 <표 3-4>의 예시에서와 같이 재정지원 예산에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가운데 교육비 및 인력양성 항목의 계수 0.72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는 배출되는 해양치유지도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해양치유산업의 인력양성 고용효과는 총 223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4-23> 해양치유 인력양성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단위: 억 원, 명)

구분	실적 (목표)	'18	'19	'20	'21	'22	계	
사업 정보 및 예산 내역	□ 사업내역			30	30	30	30	120
	■ 훈련시설확장							0
	■ 훈련프로그램운영			30	30	30	30	120
	□ 사업정보							
	■ 훈련인원(목표)	400		100	100	100	100	400
	■ 취업률(가이드라인 준용)	50%						
	■ 1년 고용 유지율(가이드라인 준용)	80%						
■ 직업훈련의 추가고용 기여율	35%							
일자리 창출 경로	<재정지출 고용효과>							
	C. : c + d = 167명							
	c. 훈련시설확장 → <표 3> 건축비			* 0억 원 ÷ 0.95 = 0명				
	d. 훈련프로그램운영 → <표 3> 교육비 및 인력양성			* 120억 원 ÷ 0.72 = 166.7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D. 훈련인원(400명) × 취업률(0.5) × 1년 고용 유지율(0.8) × 추가고용 기여율(0.35) = 56.0명								
C + D = 222.7명/(4년)								

한편 해양치유산업을 위한 4개 시범지역의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개소당 300억 원의 예산이 3년에 걸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 건립으로 인해 유발되는 고용효과는 '단일 SOC사업'의 고용효과산출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총 1,608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표 4-24〉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단위: 억 원, 명)

사업 정보 및 예산 내역	구 분	실적 (목표)	'18	'19	'20	'21	'22	계
□ 예산비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56	572	572		1,200
	□ 지출내역							0
	■ 센터건립			56	572	572		1,200
일자리 창출 경로	〈재정지출 고용효과〉							
	E. 직접고용효과							
	▶ 단일 예산항목 지출(1,200억 원) × 0.24* ÷ 0.4594** = 626.9명							
	* 비주거용건물 0.24 적용							
	** 〈표 1〉 종합건설업 0.4594 적용							
F. 간접고용효과								
▶ 단일 예산항목 지출(1,200억 원) × (1-0.24*) ÷ 0.93** = 980.6명								
* 비주거용건물 직접고용비율 0.24 적용								
** 〈표 4〉 비주거용건물 0.93 적용								
E + F = 1,607.5명/(3년)								

국민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휴양공간으로서의 해양치유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효과는 2022년까지 총 1,892명의 고용이 기대된다. 직접고용은 총 662명이며, 간접고용은 1,23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용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원당 고용효과를 분석해 보면, 예산 10억 원당 직접고용은 4.8명이며, 간접고용은 9.0명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억 원)		24	110	602	602	30	1,368
총 고용 (명)	직접고용	17.5	46.7	298.8	298.8	0.0	661.8
	간접고용	13.5	114.9	523.1	523.1	55.7	1230.3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	7.3	4.2	5.0	5.0	0.0	4.8
	간접고용	5.6	10.4	8.7	8.7	18.6	9.0

9.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1) 사업내용

관광트렌드와 관광행태 다변화,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해양관광 참여인구와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관광활동자의 50%를 해양관광인구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광시장 변화에 따라 크루즈, 해양스포츠, 생태관광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관광이 발달한 유럽연합(EU)의 경우 해양분야 5대 핵심 육성산업으로 해양관광산업을 포함하고, 해변관광, 크루즈관광, 레저보트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국내 해양관광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장의 계절성, 지역편중, 관광시설의 부족으로 지역경쟁력과 차별성이 부족하다. 국내 해양관광인구 하계 집중(40%)으로 관광지 혼잡, 만족도 저하, 계절적 실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콘텐츠 다변화, 청년창업 프로그램 마련,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관광산업 고도화를 통한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지역별 특화 개발을 통한 연안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첫째, 연안지역 자연·문화·공간자원의 연계개발을 통한 해양관광명소를 발굴·육성해야 한다. 이용자기반 관광정보체계 구축 및 상품개발 체계 마련, 해양문화 콘텐츠의 연계를 통한 지역 고유의 해양관광상품 육성·홍보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지역·자원 특화형 해양관광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역별 마리나, 크루즈, 해양생태 등 해양관광 신성장부문의 서비스업(임대/보험/금융/교육/정비 등), 공유경제를 활용한 청년창업 모델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해양관광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해양관광자원과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연안지역·공간별 해양관광 활성화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즉 해수욕장, 크루즈항만, 유희어항, 낙후 어촌마을 등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광 콘텐츠 발굴·지원에 나서야 한다.

2) 개략 사업비 산출³⁷⁾

마리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마리나체험교실 운영, 해양수산레저스포츠 운영, 국제보트쇼 개최 등을 포함하며 연간 사업비는 3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최, 국제요트대회 개최 등을 포함하여 연간 46억 원이 소요된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에는 실태조사, 안전장비 지원 등으로 10억 원이 소요된다.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는 연간 9억 원, 해양레저관광정보 기반 구축사업은 연간 3억 원, 연안유희지 휴양시설 등 해양관광진흥 추진기반 조성에는 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총 사업비는 매년 149억 원이 소요된다.

³⁷⁾ 개략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였음

〈표 4-26〉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		149	149	149	149	149	745
사업별	마리나산업	33	33	33	33	33	165
	해양스포츠	46	46	46	46	46	230
	해수욕장	10	10	10	10	10	50
	콘텐츠개발	9	9	9	9	9	45
	관광정보	3	3	3	3	3	15
	기반조성	48	48	48	48	48	240
	소계	149	149	149	149	149	745
출처별	정부재정	149	149	149	149	149	745
	민간투자						
	소계	149	149	149	149	149	745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은 ‘지출내역을 적용한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비목별 예산에 별도의 인건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효과는 없으며, 지출내역별로 부록의 〈표 3〉과 〈표 4〉의 평균지출액을 이용하여 간접 고용효과를 산출하였다.

마리나산업 육성사업,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사업,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은 부록 〈표 3〉의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의 계수 1.10을 적용하였다. 해수욕장 환경 선진화사업은 전문적인 사업관련 서비스로써 부록 〈표 4〉의 사업관련 전문서비스의 계수 0.51을, 해양레저관광정보 구축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의 계수 0.86을, 해양관광 추진기반 조성사업은 부록 〈표 4〉의 일반토목시설 건설 계수 1.43을 각각 적용하였다. 그 결과 동 사업의 고용효과는 매년 251명, 향후 5년간 1,255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4-27〉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단위 : 억 원, 명)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 세부내역별						
	▪ 마리나산업 육성	33	33	33	33	33	165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46	46	46	46	46	230
	▪ 해수욕장 환경 선진화	10	10	10	10	10	50
	▪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9	9	9	9	9	45
	▪ 해양레저관광정보 구축	3	3	3	3	3	15
	▪ 해양관광 추진기반 조성	48	48	48	48	48	240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항목이 없음						
	B. 간접고용효과 : $a + b + c + d + e + f = 1,254.6$ 명						
	a. 마리나산업 육성사업 → 〈표 3〉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 165억 원 ÷ 1.10 = 150.0명
	b.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사업 → 〈표 3〉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 230억 원 ÷ 1.10 = 209.1명
	c. 해수욕장 환경 선진화사업 → 〈표 4〉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 50억 원 ÷ 0.51 = 98.0명
	d.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사업 → 〈표 3〉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 45억 원 ÷ 1.10 = 40.9명	
e. 해양레저관광정보 구축사업 → 〈표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 15억 원 ÷ 0.86 = 17.4명	
f. 해양관광 추진기반 조성사업 → 〈표 4〉 일반토목시설 건설							
						* 240억 원 ÷ 1.43 = 521.0명	
A + B = 1,254.6명/(5년)							

본 사업에는 인건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효과를 없으며, 10억 원당 간접고용효과는 16.8명으로 나타났다.

〈표 4-28〉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억 원)		149	149	149	149	149	745
총 고용 (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250.9	250.9	250.9	250.9	250.9	1,254.6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16.8	16.8	16.8	16.8	16.8	16.8

10.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사업

1) 사업내용

한·중·일 간의 EEZ 경계획정이 불분명하고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활동을 공동으로 하고 있으나, 어족자원이 고갈로 중국의 불법어선들이 우리의 EEZ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를 하거나 영해를 침범함으로써 해양주권 침해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해양관할권 갈등으로 주변국과의 우발적 충돌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해양경비력의 증강이 필요하다.

해양경비의 증강을 위해서는 해양경비자원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경함정은 해양경비의 가장 핵심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해경함정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함정의 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즉 함정 1척당 승조원 1개팀 운영 방식을 2척당 3개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함정의 가동률을 1.5배 향상하는 ‘복수승조원제’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출동, 휴무, 정비의 3교대 출동 방식을 출동, 정비의 2교대로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함정 출동률을 33%에서 50%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현재는 함정과 인력을 한꺼번에 교대하는 방식에서 함정은 두고 인력만 교대함으로써 승조원이 쉬어도 함정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개략 사업비 산출

본 사업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고용 인원에 따라 예산 소요액이 결정되므로 별도의 사업비를 산출하지 않았다.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은 인력의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인건비가 차지한다. 고용영향평가의 지침에 따르면, 평가의 실익이 적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본 사업은 예산내역 중 인건비가 50%를 초과하는 일반 재정지출사업에 해당되어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본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은 고용영향평가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인원을 직접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복수승조원제 도입이 적용되는 해경 함정이 대형함 35척, 중형함 33척, 소형정 110척, 특수정 56척으로 총 234척이다. 이들 해경함정 2척당 1개의 추가 승조원팀이 필요하므로, 대형함정 18개팀, 중형함 17개팀, 소형함 55개팀, 특수정 28개팀의 증원이 필요하다.

함정 규모별 현재 승조원 현황을 기준으로 볼 때, 대형함은 43명, 중형함은 22명, 소형정은 6명, 특수정은 10명이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팀별 인원 수를 추가 소요팀으로 곱하면 총 1,758명의 승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승조원은 모두 직접고용에 해당되며, 간접고용은 산출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금년 내에 함정을 신규로 확보하기는 불가능해 2019년부터 반영하였다.

〈표 4-29〉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구분	함정 수(척)	추가 소요팀(개)	팀당 구성원수(명)	추가 인원(명)
대형함	35	18	43	774
중형함	33	17	22	374
소형정	110	55	6	330

해양주권 강화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 해경합정에 복수승조원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면 창출되는 고용효과는 총 1,758명의 고용이 기대된다. 이들 인원은 모두 직접고용에 해당된다.

〈표 4-30〉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억 원)							
총 고용 (명)	직접고용	0	320	350	350	458	1,758
	간접고용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11.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1) 사업내용

수산자원 회복증강 및 연안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풍요롭고 건강한 바다를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및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서 총허용어획량제도(TAC)의 확대 역시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첫째,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확대 및 자연 산란장·서식장 조성 등 수산자원 회복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산자원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둘째, TAC 제도 대상어종 확대 이행을 위한 수산자원조사원 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개략 사업비 산출³⁸⁾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은 바다숲·바다목장 조성관리 사업과 수산

38) 개략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였음

자원관리 사업(수산종자자원관리, TAC 제도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 사업비를 산출하였다. 2018년 766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4,157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전액 국고로 충당된다.

〈표 4-31〉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		766	824	840	854	873	4,157
사업별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관리	666	717	731	743	760	3,617
	수산자원 관리	100	107	109	111	113	540
	소계	766	824	840	854	873	4,157
출처별	정부재정	766	824	840	854	873	4,157
	민간투자						
	소계	766	824	840	854	873	4,157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바다숲·바다목장 조성관리를 위한 건설 및 시설, 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비에 소요되므로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세부내역별 예산을 반영한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은 아래의 〈표 4-32〉와 같다.

인건비 항목이 없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고, 세부내역별로 부록 〈표 4〉의 계수를 나눠줌으로써 간접고용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예산 4,157억 원을 투입하여 총 4,334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

1) 사업내용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T 기술과 양식기술의 융복합을 통하여 동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혁신함과 동시에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첨단 양식기술 개발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하여 첨단양식산업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인 미래양식투자포럼을 통한 사업모델 개발하여 관련 자본 및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2) 개략 사업비 산출

첨단양식산업 실증단지는 2017~2019년 동안에 계획을 수립 후에 2020년의 시범모델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직접적인 사업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예산은 2021년 38억 원, 2022년 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동 사업은 2022년까지 총 예산 103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별로는 실증단지가 58억 원, 미래양식포럼 운영과 사업모델 개발에 45억 원이 투입된다.

〈표 4-34〉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		8	4	7	45	38	103
사업별	실증단지				38	20	58
	포럼(모델)	8	5	7	7	18	45
	소계	8	4	7	45	38	103
출처별	정부재정	8	4	7	45	38	103
	민간투자						
	소계	8	4	7	45	38	103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은 첨단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건설 및 포럼운영에 관한 것으로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대상사업은 첨단양식산업 실증단지 구축과 미래양식포럼 운영 및 사업모델 개발 등이다. 세부내역별 예산을 적용한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은 아래의 <표 4-35>와 같다. 인건비 항목이 없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고, 지출내역별로 부록 <표 3>과 <표 4>의 계수를 나눠줌으로써 간접고용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예산 102억 원을 투입하여 총 113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단위: 억원, 명)						
		구분	'18	'19	'20	'21	'22	계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 세부내역별		8	4	7	45	38	102
	▪ 실증단지					38	20	58
	▪ 포럼 및 모델		8	4	7	7	18	44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항목이 없음							
	B. 간접고용효과							
	a. 실증단지→ <표 4> 건설						* 58억 원 ÷ 0.98 = 59.2명	
	b. 포럼 및 모델→ <표 3> 사업관련전문서비스						* 44억 원 ÷ 0.84 = 53.6명	
A + B= 112.8명/(5년)								

이들 고용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원당 고용효과를 분석해 보면, 예산 10억 원당 간접고용 11.1명으로 나타났다.

〈표 4-36〉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억 원)		8	4	7	45	38	102
총 고용 (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9.5	6.0	8.3	47.1	41.8	112.8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11.9	11.9	11.9	10.5	11.0	11.1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은 2017년에 계획되어 2023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동 기간은 사실 상 첨단양식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는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민간의 투자가 확대된다면, 고용 창출이 민간 부분에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13.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1) 사업내용

수산식품시장 규모는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국내 수산가공산업은 산지 입지 기반의 내수시장 의존 경향이 강하다. 즉 우리나라의 수산가공산업은 수산물 산지 입지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주요 수출항과의 연계성이 낮은 연안 어항에 산재해 있으며, 전통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내수시장에 의존한 형태로 성장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Soft-Brain ware에 기반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8개³⁹⁾의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현재의 독립적인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39) 8개 권역은 부산, 전남, 경북, 경기, 충남, 강원, 전북, 제주로 설정

2) 개략 사업비 산출

현재 전남 수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의 경우 목표에 2018년부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권역별로 규모와 사업 내용이 달라 사업비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전남의 사업비 980억 원을 적용하고자 한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3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전남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 경북,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강원, 전북, 제주는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연도별 사업비는 첫째 해 300억 원, 둘째 해 300억 원, 마지막 해 38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든 사업비는 클러스터 조성에 소요되고,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37〉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		300	1,200	2,480	2,340	1,520	7,840
사업별	클러스터 조성	300	1,200	2,480	2,340	1,520	7,840
	소계	300	1,200	2,480	2,340	1,520	7,840
출처별	정부재정	300	1,200	2,480	2,340	1,520	7,840
	민간투자						
	소계	300	1,200	2,480	2,340	1,520	7,840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은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단일 사업으로 '단일 예산항목 SOC사업'의 고용효과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방식은 단일 예산항목 지출액에 직접고용비율을 적용하여 직접 및 간접 고용효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들을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본 사업의 직접고용효과는 사업비에 산업시설건설 직접고용비율 0.26을 곱하고, 부록 〈표 1〉의 종합건설업 근로자의 평균임금 0.4594로 나누어 산출하였

다. 향후 5년간 직접고용효과는 4,437.1명으로 산출되었다. 간접고용효과는 사업비와 1-직접고용비율(0.26)을 곱하고 부록 <표 4>의 산업시설건설 1인고용 평균지출액 계수 0.8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년간 총 1만 1,600명의 고용효과가 산출되었다. 향후 5년간 본 사업을 통한 직접고용효과는 4,437명, 간접고용효과는 7,163명으로 나타났다.

<표 4-38>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단위: 억 원, 명)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구분	'18	'19	'20	'21	'22	계
		□ 비목별					
	클러스터 조성	300	1,200	2,480	2,340	1,520	7,840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7,840억 원 × 0.26* ÷ 0.4594** = 4437.1명						
	* 산업시설건설 직접고용비율 0.26 적용 ** <표1> 종합건설업 근로자 임금 0.4594 적용						
B. 간접고용효과							
▶ 7,840억 원 × (1-0.28*) ÷ 0.81** = 7,162.5명							
* 산업시설건설 직접고용비율 0.26 적용 ** <표4> 산업시설건설 0.81 적용							
A + B = 11,599.6명/(5년)							

예산 10억 원당 고용효과는 직접고용 5.7명, 간접고용 9.1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4-39>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고용효과 분석결과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억 원)		300	1,200	2,480	2,340	1,520	7,840
총 고용 (명)	직접고용	169.8	679.1	1,403.6	1,324.3	860.3	4,437.1
	간접고용	274.1	1,096.3	2,265.7	2,137.8	1,388.6	7,162.5

14.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1) 사업내용

수산물은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등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환자 등에게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 특유의 비린내, 섭취 시 가시 제거의 불편함 등으로 학교나 병원 등 단체급식 메뉴로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국산 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급식단가에 맞추기 위해 저가·저품질의 냉동 수입산 수산물 사용이 보편화되어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해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급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소비할 수 있는 수산식품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총 1만 1,698개교(100%)에서 급식을 실시, 1일 평균 614만 명(전체의 99.9%)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예산 규모로는 2016년 기준 5조 6,341억 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수부, 교육부(교육청), 수협, 지자체가 참여하여 급식 수산물 중 일정 비율을 국산으로 공급하는 지원 프로그램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대한영양사협회 등과 ‘건강한 수산물 밥상’ 캠페인 추진, 국산 수산물이 실제 급식에 활용되기 위한 요리 교육·홍보 추진 등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산식품의 우수성과 균형 잡힌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 개략 사업비 산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우수성 홍보, 공영홈쇼핑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수산물 판로확대 등 수산물 소비촉진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간 사업비는 매년 20억 원⁴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급식 판로확대에 12억 원, 홍보사업에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

40)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우수성 홍보 및 단체급식 확대 사업’ 예산 19억 9,000만 원(2017년 기준)을 준용

단된다. 본 사업은 한국수산회, 기타 수산단체 등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된다.

〈표 4-40〉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예산		20	20	20	20	20	100
사업별	급식확대	12	12	12	12	12	60
	홍보사업	8	8	8	8	8	40
	소계	20	20	20	20	20	100
출처별	정부재정	20	20	20	20	20	100
	민간투자						
	소계	20	20	20	20	20	100

3) 고용효과 분석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학교급식 확대사업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며, '지출내역을 적용한 일반 재정지출 사업'의 고용효과 산출 방식을 적용하였다. 비목별 예산에 별도의 인건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 효과는 없으며, 지출내역별로 부록의 〈표 3〉과 〈표 4〉의 평균지출액을 이용하여 간접고용효과를 산출하였다.

학교급식 확대사업은 부록 〈표 3〉의 기타 부문에 해당되어 부록 〈표 4〉의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의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을 계수로 사용하였다. 계수는 1억 원당 0.76으로 매년 15.8명, 5년간 78.9명의 고용효과가 산출되었다. 수산물 홍보사업은 부록 〈표 3〉의 광고 및 홍보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관련전문서비스의 계수 0.51을 활용하였으며, 매년 15.7명, 5년간 78.4명의 고용효과가 산출되었다.

제3절 소결

상기 제2절에서와 같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4개 정책과제의 총 고용인원은 향후 5년간 16만 1,383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직접 고용인원은 2만 49명에 달하고, 간접 고용인원은 14만 1,334명으로 추정되었다.

사업별로는 ‘원양해운 재건사업’의 고용효과가 11만 6,913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과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1만 명가량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자유무역지대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만 6,000명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과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 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43〉 해양수산 정책과제의 고용효과 분석결과(총 고용)

(단위: 명)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직접(a)		2,271	2,271	2,271	2,271	9,083
	간접(b)		139	139	139	139	556
	소계(a+b)		2,410	2,410	2,410	2,410	9,639
광역 자유무역지대 조성사업	직접(a)						
	간접(b)		1,500	1,500	1,500	1,500	6,000
	소계(a+b)		1,500	1,500	1,500	1,500	6,000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직접(a)	224	896	504	504	504	2,632
	간접(b)	160	641				801
	소계(a+b)	384	1,537	504	504	504	3,433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개선사업	직접(a)	183	183	183	183	183	914
	간접(b)	198	198	198	198	198	991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간접(b)		73	73	73	73	290
	소계(a+b)		214	214	214	214	853
원양해운 재건사업	직접(a)						
	간접(b)	16,465	21,406	26,347	26,347	26,347	116,913
	소계(a+b)	16,465	21,406	26,347	26,347	26,347	116,913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비즈니스 개발사업	직접(a)						
	간접(b)		49	49	717	717	1,533
	소계(a+b)		49	49	717	717	1,533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사업	직접(a)	18	47	299	299		662
	간접(b)	14	115	523	523	56	1,230
	소계(a+b)	30	162	822	822	56	1,892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직접(a)						
	간접(b)	251	251	251	251	251	1,255
	소계(a+b)	251	251	251	251	251	1,255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사업	직접(a)		320	350	350	458	1,758
	간접(b)						
	소계(a+b)		320	350	350	458	1,758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직접(a)						
	간접(b)	799	859	876	890	910	4,334
	소계(a+b)	799	859	876	890	910	4,334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	직접(a)						
	간접(b)	10	6	8	47	42	113
	소계(a+b)	10	6	8	47	42	113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직접(a)	170	679	1,404	1,324	860	4,437
	간접(b)	274	1,096	2,266	2,138	1,389	7,163
	소계(a+b)	444	1,775	3,669	3,462	2,249	11,600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직접(a)						
	간접(b)	32	32	32	32	32	157
	소계(a+b)	32	32	32	32	32	157
합계	직접(a)	594	4,536	5,151	5,071	4,417	20,049
	간접(b)	18,201	26,364	32,262	32,855	31,653	141,334

예산 10억 원당 고용효과는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이 25.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16.8명,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15.7명,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14.8명,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사업’ 13.8명 순으로 산출되었다. 반면에 ‘원양해운 재건사업’과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경우 각각 8.2명, 6.1명으로 투입 예산 대비 고용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4개 정책과제의 10억 원당 평균 고용인원은 9.1명으로 나타났다.

〈표 4-44〉 해양수산 정책과제의 고용효과 분석결과(예산 10억 원당 고용)

순위	정책과제명	인원(명)
1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25.1
2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16.8
3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15.7
4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14.8
5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사업	13.8
6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개선사업	12.7
7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11.6
8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비즈니스 개발사업	11.2
9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시범사업	11.1
10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10.4
11	원양해운 재건사업	8.2
12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6.1
	평균	9.1

주 : ‘광역 자유무역지대 조성사업’은 예산 투입 없이 제도 개선만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사업이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사업’은 사업비 산출근거 부재로 제외

한편 해양수산 정책과제의 고용효과를 타 분야와 비교해 보기 위해 고용영향 평가 전담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5~2016년 동안 수행한 각 부처 재정

사업의 고용영향평가결과를 정리하였다.⁴¹⁾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사업’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유경제 관련 산업규제 완화사업’ 37.6명,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22명, ‘그래핀소재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19명,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대책’ 18명 순이었다.

〈표 4-45〉 타 분야 정책과제의 고용효과 분석결과(예산 10억 원당 고용)

순위	정책과제명	사업개요	인원(명)
1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	41
2	공유경제 관련 산업규제 완화사업	공유숙박, 카셰어링	37.6
3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비수도권 특성화사업, 수도권 특성화사업	22
4	그래핀소재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그래핀소재 및 5개 응용분야 부품개발	19
5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대책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센터 설치, 연구 생태계조성, 투자 제도 개선, 시장진입 지원	18
6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플랫폼 구축, 서비스실증, 센터 구축 및 운영	16
	창업사원화 지원사업	창업맞춤형 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창업인턴제	16
	R&D사업화를 통한 민간 R&D 투자 촉진방안	R&D 평가 개선 등 구조개선, R&D 사업화 지원 예산 확대	16
7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사업	스포츠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 스포츠산업 기술기반조성(R&D), 스포츠산업 해외진출 컨설팅 등 글로벌화 지원, 스포츠산업용품 시험 및 인증,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14

41) 10억 원당 고용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예산정보가 없는 규제개선 관련 정책과제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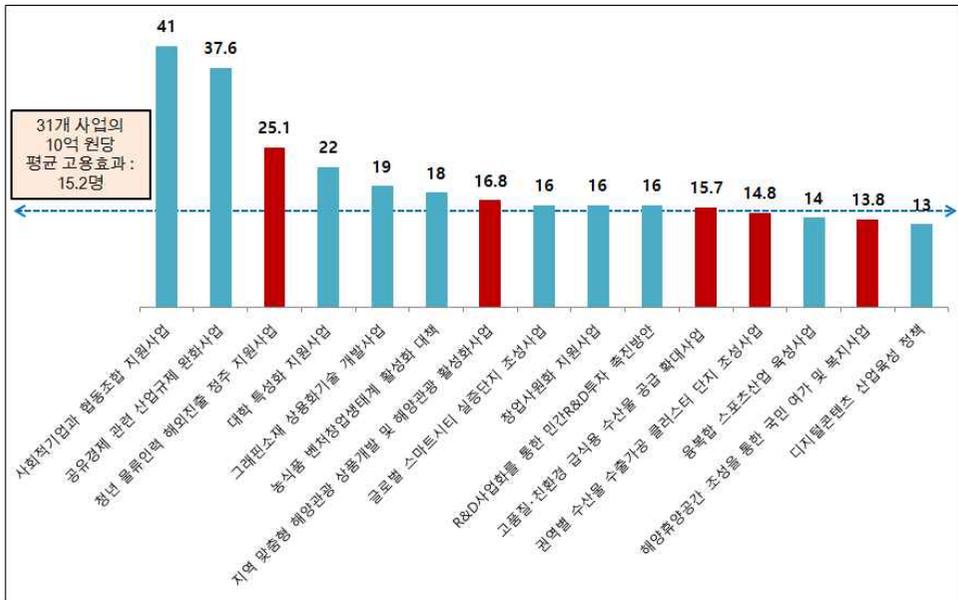
순위	정책과제명	사업개요	인원(명)
8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정책	컴퓨터그래픽 분야, 스마트콘텐츠 분야	13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신화역사공원 조성, 복합리조트단지 조성	13
	지역 환경혁신 클러스터 육성 정책	실증화연구지원센터, 실증화실험시설, 생산지원센터	13
	희망리턴 패키지사업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재기교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취업알선 지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13
9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 클라우드 활성화	12
10	창조경제벨리 조성사업	창조공간 선도 프로젝트 추진,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공간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11
11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사업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10
	장기구직자 실업급여 적용사업	장기구직자 실업급여 적용	10
12	드론산업 규제 완화 정책	드론 생산 확대 드론 활용 확산(직접 운용인력, 드론 서비스, 인력양성)	9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부산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9

해양수산 분야와 타 분야 정책과제를 혼합하여 10억 원당 고용효과가 우수한 정책과제 상위 15개를 재정리하면 [그림 4-2]와 같다.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효과가 전체에서 3위에 해당할 정도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과제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7위,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11위,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12위,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 및 복지사업’ 등 15위권 내에 5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31개 과제의 단순평균한 10억 원당 평균 고용효과는 15.2명으로 해양수산 정책과제 중에서는

3개 과제가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해양수산 분야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며, 특히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사업이라 판단된다.

[그림 4-2] 고용효과 상위 15개 정책과제 현황(10억 원당 고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나들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경우 2010년을 정점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더구나 ‘제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 들어 제일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람중심 경제’로 압축되며,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과 일자리위원회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안)」을 수립하고, 해양수산 분야 약 3만 8,000개, 타 분야 약 7만 8,000개 등 총 11만 6,000개를 창출할 목표를 설정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해양수산부 주관과제가 3개가 포함되었으며, 그 밖에 20여개 과제도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이 깊다. 그만큼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적 중요도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 역시 해양수산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양수산 분야는 해운, 항만, 수산, 해양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기회가 큰 분야에 속한다. 나아가 해양수산 일자리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속성상 무역 인프라 기능 수행, 국민 안심 먹거리 제공, 해양영토 수호, 국민의 삶과 생활터전 관리 등 기능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표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어느 정도 고용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측정하였다. 일자리 창출 분야로는 KMI에서 수립한 ‘신정부 해양수산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새로운 분야를 계속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 발굴된 정책과제의 고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시키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고용영향평가 표준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으나, 사업비 추정이 곤란⁴²⁾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의 경우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산 10억 원당 고용효과는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이 직접 고용인원 23.7명, 간접 고용인원 1.4명 등 25.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해양관광 활성화사업’ 16.8명,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사업’ 15.7명,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14.8명, ‘해양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여가 및 복지사업’ 13.8명 순으로 산출되었다. 14개 정책과제의 10억 원당 평균 고용인원은 9.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용영향평가 전담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5~2016년에 평가한 재정사업의 고용효과와 비교하면, 해양수산 정책과제는 상위 15개 중 5개가 포함되었다. 특히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의 고용효과는 3위에 해당할 정도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수산 분야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로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제2절 정책제언

해양수산 분야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의 인식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2) 단, 아직까지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하여 고용효과를 측정하였음.

1) 일자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유도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수산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해운, 항만, 수산, 조선, 해양레저관광,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해양영토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 기회도 크다. 공공부문의 경우 해양경비 및 안전 분야, 해양환경 관리 분야, 수산물 품질 및 검역 관리 분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공공서비스가 부족했던 분야에서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해운, 항만, 물류, 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산업 특성 상 무역대국의 인프라, 먹거리 제공, 삶의 터전 제공 등 국민경제와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 평가된다. 따라서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의 당위성과 시급성, 고용효과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부, 국회 등 의사결정자를 설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수산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2) 해양수산 고용통계 시스템 구축

일자리 만들기는 고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 출발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산업통계, 고용통계 등 정부 통계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못하고 다수의 연관산업에 분산·통합되어 있다. 또한 별도의 해양수산 고용통계도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자리 수급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양수산 사업체의 고용현황, 인력수급 실태, 기존 종사자의 이직 및 전직 현황 등 해양수산 분야 고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 중심적 정책 추진

평가 제도를 고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해양수산 분야의 재정사업은 고용효과보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선시하여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될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따라서 정책수행자들의 실적 평가 시 고용 창출 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국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든

재정사업에 고용효과 분석과 고용창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후 평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고용 중심적 정책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4)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 유도 전략 수립

일자리 만들기에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공공일자리는 민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자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데다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만들기와는 별도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매력적인 일터를 만드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해양수산 일자리 컨트롤타워 설치

현재 해양수산부의 직제는 기능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일자리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 일자리 창출 분야 발굴 및 성과 관리 등 일자리 전담조직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부처 내에 해양수산 일자리 업무를 전담하는 팀 또는 TF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강순희 외, 『직업능력훈련 분야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 2016.12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7.1
 고용노동부, 『2017년 고용영향평가(재정사업) 가이드라인』, 2017.4
 남재량 외, 『창업지원사업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2016
 오상훈, 『고용영향평가 제도 및 방법론』, 2017.9
 오상훈 외, 『SOC 분야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 2016.12
 _____,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2016.12
 이근희 외, 『일반사업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 2016.12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10
 정진호 외, 『ODA 사업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 2016.12
 최강식 외, 『고용서비스 분야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 2016.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방안』, KMI 동향분석 30
 호, 2017.6
 _____, 『신정부 해양수산 정책과제』, 2017.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장전망 분석』, 2017.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동향 파악 및 고용 활성화 방안』, 2016.5
 _____, 『해양수산 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6.8
 _____,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안)』, 2017.8

<인터넷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jsp>)

부 록 <<

〈표 1〉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근로자 임금(2016)

(단위: 억 원)

산업중분류	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산업중분류	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B. 광업	0.4698	H. 운수업	0.3783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0.5780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0.2989
금속광업	0.4698	수상운송업	0.4811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제외	0.4333	항공운송업	0.6573
광업지원서비스업	0.6035	참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0.4654
C. 제조업	0.4568	I. 숙박및음식점업	0.2786
식품제조업	0.3364	숙박업	0.3241
음료제조업	0.5056	음식점및주점업	0.2663
담배제조업	0.796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5134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0.3338	출판업	0.4693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0.3482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0.4100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0.3140	방송업	0.666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0.3482	통신업	0.6468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0.3796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0.537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0.3392	정보서비스업	0.4890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0.8961	K. 금융및보험업	0.6968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0.5665	금융업	0.6939
의약품및의약품제조업	0.4861	보험및연금업	0.630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0.388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0.778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4566	L. 부동산업및임대업	0.3179
1차금속제조업	0.5211	부동산업	0.3117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0.3911	임대업:부동산제외	0.398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0.5701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0.5864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0.3912	연구개발업	0.6873
전기장비제조업	0.4318	전문서비스업	0.642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0.426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공학기술서비스업	0.455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0.5644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0.391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5126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0.2615
가구제조업	0.3830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0.2578
기타제품제조업	0.3300	사업지원서비스업	0.2628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7658	P. 교육서비스업	0.4812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0.7753	교육서비스업	0.4812
수도사업	0.7030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0.3530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0.3861	보건업	0.4381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0.3910	사회복지서비스업	0.2418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0.3838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0.3737
환경정화및복원업	0.4446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0.3652
F. 건설업	0.4077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0.3763
종합건설업	0.4594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0.3280
전문직별공사업	0.3661	협회및단체	0.3372

〈표 2〉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소유권이전, 해외이전, 기타잡비 제외)

(단위: 억 원)

목-세목	과목명	정부지출액	목-세목	과목명	정부지출액
100	인건비		03	연금지급금	직접고용 계산
110	인건비	직접고용 계산	04	보험금	0.82
01	보수		05	이차보전금	1.18
02	기타직 보수		06	구호및고정비	1.18
03	상용임금	직접고용 계산	07	민간자본보조	〈표4〉 해당산업
04	일용임금		08	법정민간대행사업비	〈표4〉 해당산업
05	연가보상비		09	고용부담금	직접고용 계산
200	물건비		330	자치단체이전	
210	운영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01	일반수용비	0.94	02	자치단체 교부금	〈표4〉 해당산업
02	공공요금 및 제세	5.13	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3	피복비	1.29	04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4	급식비	0.76	340	해외이전	
05	특근매식비	0.76	01	해외경상이전	
06	일숙직비	분석 제외	02	국제부담금	분석 제외
07	임차료1)	1.11/1.27	03	해외자본이전	
08	유류비	7.17	350	출연금	
09	시설장비유지비	0.39	01	기관운영출연금	
10	학교운영비	0.72	02	사업출연금	〈표4〉 해당산업
11	재료비	〈표4〉 해당산업	03	금융성기금출연금	
12	복리후생비	1.18	04	민간기금출연금	
13	시험연구비	0.91	360	연구개발 출연금	
14	일반운영비	〈표4〉 해당산업	01	연구개발인건비	직접고용 계산
15	관리운영비	0.91	02	연구개발경상경비	0.51
16	기타운영비	0.39	03	연구개발건축비	0.95
220	여비		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표4〉 해당산업
01	국내여비	0.88	05	연구개발활동비등	0.89
02	국외업무여비	분석 제외	400	자산취득 및 운용	
03	국외교육여비		410	건설보상비	분석 제외
230	특수활동비	분석 제외	420	건설비	
240	업무추진비		01	기본조사설계비	0.91
01	사업추진비	분석 제외	02	실시설계비	0.91
02	관서업무추진비		03	공사비	〈표4〉 해당산업
250	직무수행경비		04	감리비	0.91
01	교수보직경비	분석 제외	05	시설부대비	1.18
02	직책수행경비		430	유형자산	
03	특정업무경비		01	자산취득비2)	〈표4〉 해당산업
260	연구운영비		02	저장품매입비	
01	일반연구비	0.89	440	무형자산	분석 제외
02	정책연구비	0.89	450	융자금	
300	이전지출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310	보전금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1	손실보상금	분석 제외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표4〉 해당산업
02	배상금		04	기타 민간융자금	
03	포상금		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04	기타보전금		460	출자금	

〈표 3〉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소유권이전, 해외이전, 기타잡비 제외)

(단위 : 억 원)

분류	지출내역별	산업별 배분	정부지출액
경상비	난방, 수도비	전력, 가스 및 증기(대분류)	5.13
	건축비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0.95
	숙박비, 식음료비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대분류)	0.79
	교통비, 여비	육상운송서비스/항공운송서비스	0.88/3.67
	우편, 전화료	통신서비스	1.05
	간식비	음식료품(대분류)	1.43
기자재 및 장비비	기계 및 장비	기계 및 장비(대분류)	1.39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대분류)	2.35
	정밀기기	정밀기기	1.42
	운송장비	운송장비(대분류)	1.58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94
	장비임대료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1.27
원료비	석탄 및 석유제품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7.17
	화학제품	화학제품(대분류)	2.14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대분류)	1.62
	1차금속제품	1차금속제품(대분류)	2.66
	금속제품	금속제품	1.56
사업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청소, 경비 등 단순업무)	0.39
	출판, 교재구입비	출판서비스	0.72
	임차료	부동산서비스/기계장비및용품임대	1.11/1.27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0.89
	프로그램운영비, 네트워크구축, 사업운영비, 창업지원비, 업무활동운영비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51
	마케팅지원, 광고 및 홍보비, 컨설팅비, 사업전문서비스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51
	설계비, 감리비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0.91
	교육비 및 인력양성	교육서비스	0.72
	오락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1.10
	자동차수리, 이미용세탁	수리 및 개인서비스	0.69
	사무용품구입비(문방구류, 잉크, 토너)	기타 제조업제품 및 임가공	0.94
	부동산구입, 인허가비 등	-	분석효과 제외

〈표 4〉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단위: 억 원)

번호	산업별 분류	평균지출액	번호	산업별 분류	평균지출액
01	농림수산물	2.23	16	전력, 가스 및 증기	5.13
001	작물	2.38	046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3.72
002	축산물	1.91	047	가스, 증기 및 온수	15.47
003	임산물	2.25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1.27
004	수산물	2.09	048	수도	1.92
005	농림어업 서비스	0.84	049	폐수처리	1.18
02	광산물	1.71	050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1.07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1.07	18	건설	0.98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1.67	0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0.95
03	음식료품	1.43	108	주거용 건물	0.95
008	식료품	1.32	109	비주거용 건물	0.93
009	음료품	1.45	110	건축보수	1.04
010	담배	2.17	052	토목건설	0.96
04	섬유 및 가죽제품	1.31	111	교통시설 건설	1.09
011	섬유 및 의복	1.29	112	일반토목시설 건설	1.43
012	가죽제품	1.17	113	산업시설 건설	0.81
05	목재 및 종이, 인쇄	1.21	114	기타건설	0.33
013	목재및목제품	1.20	19	도소매 서비스	-
014	펄프 및 종이제품	1.39	053	도소매서비스	0.76
015	인쇄 및 복제	0.79	20	운송 서비스	1.23
06	석탄 및 석유제품	-	054	육상운송서비스	0.88
016	석탄 및 석유제품	7.17	055	수상운송서비스	4.90
07	화학제품	2.14	056	항공운송서비스	3.67
017	기초화학물질	4.72	057	참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0.86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2.70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019	화학섬유	2.65	0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76
020	의약품	1.61	2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97
021	비료 및 농약	2.14	059	통신서비스	1.05
022	기타 화학제품	1.89	060	방송서비스	0.94
023	플라스틱제품	1.42	061	정보서비스	1.04
024	고무제품	1.58	062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0.86
08	비금속광물제품	1.62	063	출판서비스	0.72
025	유리 및 유리제품	2.03	0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0.96
0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38	2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04
09	1차 금속제품	2.66	065	금융서비스	1.22
027	철강1차제품	2.83	066	보험서비스	0.82
028	철강가공제품	2.26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0.65
029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	2.70	24	부동산 및 임대	2.27
030	금속 주물	1.53	068	주거서비스	5.94
10	금속제품	1.63	069	부동산서비스	1.11
031	금속제품	1.56	070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1.27
11	기계 및 장비	1.39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78
032	일반목적용기계	1.32	071	연구개발	0.89
033	특수목적용기계	1.31	0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51
12	전기 및 전자기기	2.35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0.91
034	전기장비	1.49	26	사업지원서비스	-
035	반도체	3.30	074	사업지원서비스	0.39
036	전자표시장치	3.29	27	공공행정 및 국방	-
037	기타 전자부품	1.53	075	공공행정 및 국방	0.98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2.61	28	교육서비스	-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2.63	076	교육서비스	0.72
040	가정용 전기기기	1.27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60
13	정밀기기	-	077	의료 및 보건	0.83
041	정밀기기	1.42	078	사회복지서비스	0.28
14	운송장비	1.58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	0.72
042	자동차	1.46	079	문화서비스	0.73
043	선박	1.52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1.10

〈표 5〉 상환기간 계수

기간		대출기간									
		1	2	3	4	5	6	7	8	9	10
거 치 기 간	0	0.052	0.077	0.101	0.124	0.146	0.167	0.188	0.208	0.228	0.246
	1	.	0.102	0.125	0.148	0.169	0.190	0.211	0.230	0.249	0.268
	2	.	.	0.148	0.171	0.192	0.213	0.233	0.252	0.271	0.289
	3	.	.	.	0.193	0.214	0.234	0.254	0.273	0.291	0.309
	4	0.235	0.255	0.274	0.293	0.311	0.328
	5	0.275	0.294	0.312	0.330	0.347
	6	0.313	0.330	0.348	0.364
	7	0.348	0.365	0.382
	8	0.382	0.398
	9	0.415

자료 : 고용노동부, 2017년 고용영향평가(재정사업) 가이드라인, 2017.4

〈표 6〉 이자율 차 계수(이자율 차 1%)

기간		대출기간									
		1	2	3	4	5	6	7	8	9	10
거 치 기 간	0	0.009	0.014	0.019	0.024	0.028	0.033	0.038	0.043	0.047	0.052
	1	.	0.019	0.023	0.028	0.033	0.038	0.043	0.047	0.052	0.057
	2	.	.	0.028	0.033	0.038	0.043	0.047	0.052	0.057	0.062
	3	.	.	.	0.038	0.043	0.047	0.052	0.057	0.062	0.066
	4	0.047	0.052	0.057	0.062	0.066	0.071
	5	0.057	0.062	0.066	0.071	0.076
	6	0.066	0.071	0.076	0.081
	7	0.076	0.081	0.085
	8	0.085	0.090
	9	0.095

자료 : 고용노동부, 2017년 고용영향평가(재정사업) 가이드라인, 2017.4

〈표 7〉 직접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분석 예시

(단위 : 명, %, 백만 원)

	구 분	실적(목표치)	'18년 예산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input type="checkbox"/> 세부내역별		23,485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접경비		129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경상보조(활동비+부대경비)		23,356
	<input type="checkbox"/> 비목별		23,485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수용비(210-01)		81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내여비(220-01)		26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추진비(240-01)		22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경상보조(320-01)		23,356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건비 항목		
	민간경상 보조(활동비+부대경비) = 233.5억 원		
	A.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233.5억 원) ÷ 0.2418* = 965.7명		
	* 〈표1〉 사회복지서비스업 0.2418 적용		
	B. 간접고용효과 a + b + c = 1.2명		
	a. 일반수용비 → 〈표2〉 일반수용비	* 0.81억 원 ÷ 0.94 = 0.9명	
	b. 국내여비 → 〈표2〉 국내여비	* 0.26억 원 ÷ 0.88 = 0.3명	
	c. 사업추진비 → 분석제외	* 분석제외	
A + B = 966.9명			

자료 : 고용노동부, 2017년 고용영향평가(재정사업) 가이드라인, 2017.4

〈표 8〉 직업능력개발훈련(인력양성) 사업 고용효과 분석 예시

(단위 : 명, %, 백만 원)

	구 분	실적(목표치)	'18년 예산
사업정보 및 예산 내역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역		25,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훈련시설확장		2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훈련프로그램운영		5,000
	<input type="checkbox"/> 사업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훈련인원('18년 목표)	1,000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업률('17년 실적)	50%	
	<input checked="" type="checkbox"/> 1년 고용 유지율('17년 실적)	8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업훈련의 추가고용 기여율	35%	
일자리 창출 경로	〈재정지출 고용효과〉		
	a. 훈련시설확장 → 〈표3〉 건축비		* 200억 원 ÷ 0.95 = 210.5명
	b. 훈련프로그램운영 → 〈표3〉 교육비 및 인력양성		* 50억 원 ÷ 0.72 = 69.4명
a + b = 280명			

〈표 9〉 고용서비스(취업알선) 사업 고용효과 분석 예시

(단위 : 명, %, 백만 원)

	구 분	실적(목표치)	'18년 예산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 사업내역		1,500
	▪ 사업 홍보		500
	▪ 고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300
	▪ 컨설팅 사업		700
예산내역	□ 사업정보		
	▪ 취업알선인원('17년목표)	10,000명	
	▪ 취업성공률('16년실적)	70%	
고용효과	1년 고용유지율	70%	
	〈재정지출 고용효과〉 a.사업홍보 → 〈표3〉 홍보비 * 5억 원 ÷ 0.51 = 9.8명 b.고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표3〉 사업관련전문서비스 * 3억 원 ÷ 0.51 = 5.9명 c.컨설팅사업 → 〈표3〉 사업관련전문서비스 * 7억 원 ÷ 0.51 = 13.7명 a + b + c = 29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취업알선인원(10,000명) × 취업률(0.7) × 1년 고용 유지율(0.7) × 추가고용기여율(0.386)* = 1,891명 * 중장년대상 0.386 적용		

자료 : 고용노동부, 2017년 고용영향평가(재정사업) 가이드라인, 2017.4

〈표 10〉 고용장려금 사업 고용효과 분석 예시

(단위 : 명, %, 백만 원)

	구 분	실적(목표치)	'18년 예산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 예산비목		12,500
	▪ 민간경상보조(320-01)		12,500
예산내역	□ 사업정보		
	▪ 지원대상인원('17년목표)	500명	
고용효과	▪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30%	
	〈재정지출 고용효과〉 ■ 민간경상보조 → 〈표4〉 전산업 * 125억 원 ÷ 1.18 = 106명 = 106명		
고용효과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지원대상인원(500명) × 지원후 1년 고용유지율(0.3) × 추가고용기여율(0.1311)* = 20명 *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0.1311 적용		

〈표 11〉 창업지원 사업 고용효과 분석 예시

(단위 : 명, %, 백만 원)

	구 분	실적(목표치)	'18년 예산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 예산비목		15,00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000
	▪ 민간경상보조(320-01)		10,000
	□ 사업정보		
	▪ 지원업체수('17년목표)	200개	
	▪ 창업률('16년실적)	70%	
	▪ 1년 후 생존률	90.1%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시설장비유지비 → <표2> 시설장비유지비 * 50억 원 ÷ 0.39 = 128.2명 b. 민간경상보조 → <표4> 전산업 * 100억원 ÷ 1.18 = 84.7명 a + b = 213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지원업체수(200개) × 창업률(0.7) × 1년 후 생존율(0.901) × 기업당 추가고용효과(0.11)* = 14명 * 판로마케팅지원 0.11 적용		

자료 : 고용노동부, 2017년 고용영향평가(재정사업) 가이드라인, 2017.4

〈표 12〉 단일 예산항목 SOC사업 고용효과 분석 예시

(단위 : 명, %, 백만 원)

	구 분	실적(목표치)	'18년 예산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 예산비목		20,000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20,000
	□ 지출내역		
	▪ 광역 BRT 구축		20,000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200 \times 0.28^* \div 0.4594^{**} = 121.9$ 명 * 교통시설건설 직접고용비율 0.28 적용 ** <표1> 종합건설업 근로자 임금 0.4594 적용 b. 간접고용효과 ■ $200 \times (1-0.28^*) \div 1.09^{**} = 132.1$ 명 * 교통시설건설 직접고용비율 0.28 적용 ** <표4> 교통시설건설 1.09 적용 a + b = 254명		

〈표 13〉 용자사업 고용효과 분석 예시

(단위 : 명, %, 백만 원)

	구 분	실적(목표치)	'18년 예산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 예산비목		800,000
	■ 기타민간융자금(450-04)		800,000
	□ 지출내역		
	■ 신성장유망		450,000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		50,000
	■ 고성장기업 전용		300,000
고용효과	〈용자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		
	- 대출기간 8년		
	- 융자금리 연 4.1% 조건		
	〈재정지출 고용효과〉		
a. 간접고용효과	■ 8,000억 원 ÷ 1.18* = 6,779.7명 * 〈표4〉 전산업 1.18 적용		
b. 정부융자기여율(3년 거치, 8년 대출)	■ 상환기간계수(0.273) + 이자율 차(0.04) × 이자율 차 계수(0.057) = 0.275 a × b = 1,864명		

자료 : 고용노동부, 2017년 고용영향평가(재정사업) 가이드라인, 2017.4

〈표 14〉 ODA사업 고용효과 분석 예시

(단위 : 명, %, 백만 원)

	구 분	실적(목표치)	'18년 예산
사업정보 및 예산내역	□ ODA사업	40,000	1,500
	■ ODA사업단인건비	1,000	500
	■ 국제분담금	38,000	300
	■ 숙박 및 식음료비	1,000	700
고용효과	ODA 관련 해외채용인원 10명 전제		
	〈재정지출 고용효과〉		
	A. 직접고용효과	■ ODA사업단 인건비(10억 원) ÷ 0.5864* = 17.1명 * 〈표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5864 적용	
	B. 간접고용효과		
	a. 국제분담금 → 분석제외	*분석제외	
	b. 숙박 및 식음료비 → 〈표3〉 숙박 및 식음료비 0.79	*10억 원 ÷ 0.79 = 12.7명	
C. ODA 관련 해외 한국인 채용인원 10명			
	A + B + C = 40명		

〈표 15〉 신정부 해양수산 정책과제 현황

정책과제	100대 국정과제 연관성
(1) 해기인력 고용 확대	16
(2) 해운물류산업의 해외 청년 일자리 창출	16
(3)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16
(4) 수산물·수산식품 수출 일자리 창출	16
(5) 수산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34
(6) 4차 산업을 활용한 첨단양식산업 육성	84, 34
(7) 4차 산업혁명 기반 해상환경분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34
(8)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운 비즈니스 개발	34
(9) 4차 산업혁명, 항만산업 재도약	34
(10) 융·복합 미래형 해운·물류 산업기지 조성	34
(11) 원양해운 재건(글로벌 메가 컨테이너 선사 육성)	80
(12) 중견 인트라아시아 선사 육성	80
(13) 해운발전기금 신설 및 해운정책금융 혁신	80
(14) 노후 선박의 폐선 촉진을 위한 보조금 도입	80
(15) 공공선박 조기 발주를 통한 조선산업 수요 창출	80
(16) 해운-조선 관측센터 운영 및 행정 일원화	80
(17) LNG 추진 선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80
(18) 항만 위험화물 검사 및 관리체계 개선	80
(19) 유류항만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	80
(20) 수출입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	80
(21) 글로벌 물류자동화 클러스터 육성	80
(22) 지역성장을 위한 연안·해양 지역연계 발전방안	79
(23)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84
(24) 수산분야 여성어업인 육성 및 지원 강화	82
(25) 수산자조금사업 확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보전	82
(26) 수산자원 보전 및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휴어직불제 도입	84
(27) 수산 의무자조금 확대를 통한 마케팅보드 활성화	82
(28)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 확대	82
(29) 수산식품산업의 현장 맞춤형 신거버넌스 체제 구축	84

정책과제	100대 국정과제 연관성
(31) 수산물 건조장 농사용 전기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	84
(32) 해외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지원 확대	84
(33) 내수면 어업 6차 산업화	84
(34) 신양식산업 그랜드 디자인	84
(35) 해외 수산투자 활성화	84
(36)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	84
(37) 수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84
(38)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센터 조성 확대	81
(39) 낙도지역의 어업인 보건서비스 확대	81
(40) 어촌 정비 및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	81
(41) 어촌·어업인 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81
(42) 유희여향을 활용한 어촌지역 관광산업 클러스터화	81
(43) 수산분야 개발원조사업 추진	99
(44) 북극 중앙해 조업 거버넌스 참여노력 강화	98
(45) 극지 및 해외자원개발 촉진 도모	98
(46) 제2의 원양어업 도약(원양산업화 도모)	84
(47) 어업용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및 재활용 확대	84
(48) 폐어구를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확대	84
(49) 유·무인도서 통합관리체계 구축	62
(50) 스마트 연안·항만 재생체계 구축	78
(51) 도서지역 항만인프라 개선	62
(52) 북극 항로 공동개척을 위한 종합대응체계 구축	98
(53) 개도국 전자지도 협력을 위한 동해표기 대응	62
(54) 단독시험탐사를 통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대응	62
(55)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비 수산분야 통상외교 역량 강화	100
(56) FTA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입 증가 대응	100
(57) 수산부문 한·미 FTA 재협상 대응	100
(58) 북한 해양수산 5대 권역 프로젝트 추진	90
(59) 유라시아 신물류시장 연계 한반도 물류네트워크 구축	90
(60) 동서해 남북접경 연안해양 공동번영 기반 구축	90

정책과제	100대 국정과제 연관성
(63) 해상교통안전 재난관리 운영체계 일원화	55, 62
(64) 선박에 의한 항만도시(연안지역) 미세먼지 오염 저감	62
(65)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 추진	62, 58
(66) 연안여객 서비스 준공영제 도입	62
(67) 해양경찰 기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수호	62, 56
(68) 독도 및 이어도에 대한 비분쟁화 영유권 강화	62
(69) 중국 불법조업 대응 강화	62
(70)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망 구축	54, 84
(71) 고품질·친환경 급식용 수산물 공급 확대	83, 84
(72) 수협의 유통 기능 강화를 통한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83, 84
(73) 수산시장 위생관리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57, 84
(74) 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수산관측 기능 강화	84
(75) 고효율 친환경 양식장 조성	84
(76) 해양환경 통합적·입체적 관리체계 마련	84
(77)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항만클러스터 구축	37
(78)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표준화 선도	61
(79) 해양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73
(80) 국민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휴양공간 조성	73
(81)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개발 및 활성화	73
(82) 부산 북항 재개발 원도심 연계	79
(83) 제주 신행만 조기 개발 추진	78
(84) 광양항, 미래지향적 항만으로 육성	78
(85) KMI 해운시장분석센터 기능 확대	80
(86) KMI 국제해양규범연구소 설립	62
(87) KMI 전남分院 설립	98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정부 해양수산 정책과제, 2017.5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 인 쇄	2017년 10월 23일 인쇄
• 발 행	2017년 10월 25일 발행
• 발 행 인	양 창 호
•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 조판·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 02-2273-1775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

정가 6,000원